

202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

- 일 시 : 2020. 11. 13. (금) 14:00~15:30
- 장 소 : 프레스센터 위원회 6층 강의실

- 이 발간물에 게재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발간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진행순서

14:00~14:10 인사말 |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사회 |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4:10~14:25 [제1주제]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발표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4:25~14:40 [제2주제]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

발표 | 유현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14:40~15:00 [지정토론]

토론자 | 권태훈 (SBS 기자,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최명진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15:00~15:30 [종합토론]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석형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기가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접하실 분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가까워졌으나, 그 확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누리던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도 한순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활동이나 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르고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처럼 청중 없이 진행되는 토론회도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새로운 풍경입니다.

그러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로 대변되는 K-방역은 지혜를 모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질서와 안전, 개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언론보도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이 확산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문제인 듯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언론보도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취재 경쟁에 매몰되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초상 등 인격권 보호를 매우 소홀히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대로 체크 없이 부정확한 정보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 전담중재부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를 신속히 바로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정권고를 통해서도 언론보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중보건의 위기 속에서도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언론보도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오늘 토론회가 큰 도움과 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위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유현재 서강대 지식미디어융합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을 주제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장을 역임한 SBS 권태훈 기자,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우리 위원회 최명진 기획팀장이 참여합니다. 사회는 윤성옥 경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풍성한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언론이 올바른 자세와 방향을 찾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형

# 목 차

## ■ 제1주제

###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 1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 제2주제

###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 ..... 29

- 유현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지정 토론문 ..... 55

▣ 제 1 주 제

#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차별 문제와 해법

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코로나19 보도 속의 혐오 차별 문제와 해법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일시: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언론중재위원회

---

## 혐오와 차별의 의미

- **혐오(hate):** 특정 소수자 개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  
cf) 사전적 의미: 싫어하고 미워함. to dislike someone or something very much
- **차별(discrimination):**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여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cf. 증오범죄(hate crime): 편견에 기반한 범죄(폭력, 방화, 살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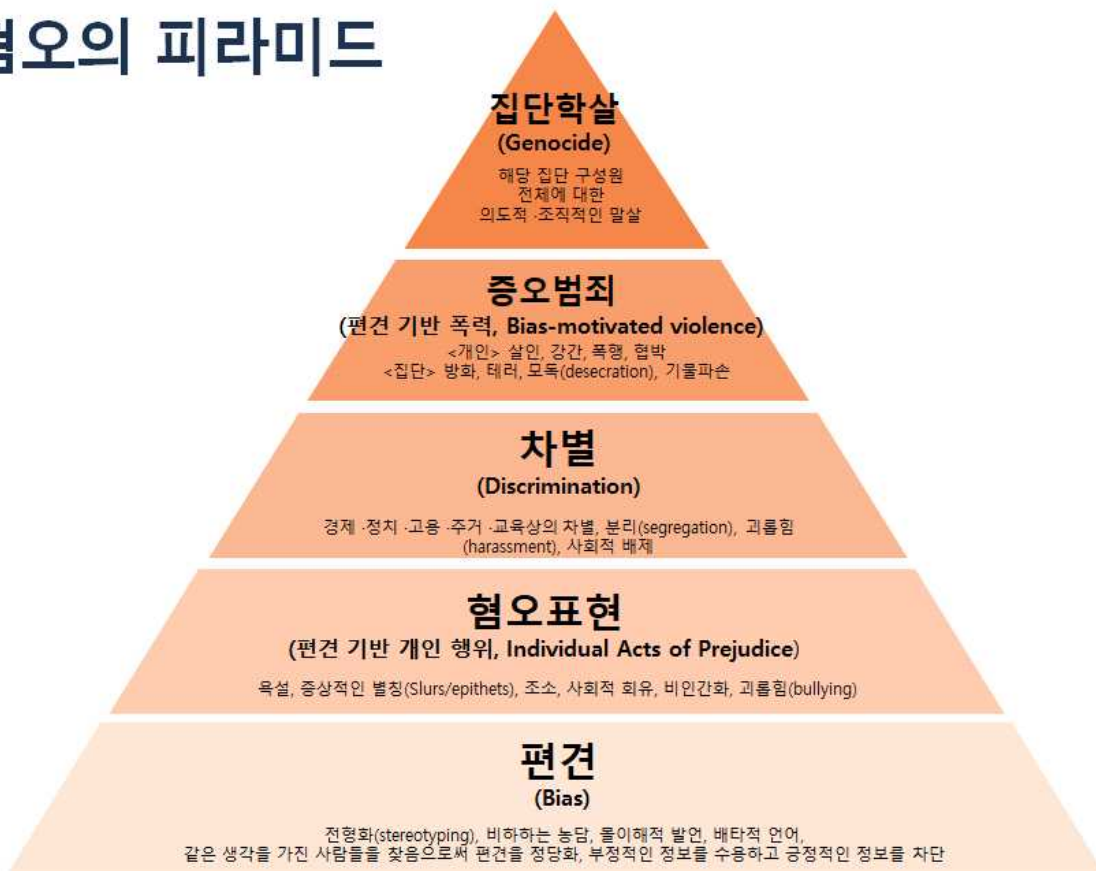
# 혐오표현의 개념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 2) 차별 ·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 조장 ·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 혐오의 피라미드



\* 출처: <http://www.adl.org/assets/pdf/education-outreach/Pyramid-of-Hate.pdf>

---

## 혐오와 차별의 해악

-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침해, 인격적 모멸감 (Hellman, 2008)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 훼손 (형식적/실질적 기회 상실) (Waldron, 2012)
- 소수자 집단의 집단적 피해 (cf. 특정하는 경우, 특정하지 않는 경우)
-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확산
- 폭력(증오범죄)의 유발

---

## 세계의 혐오

- 20세기 인류의大悲극에 대한 반성
  - 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소트: 유대인, 소수인종, 소수민족, 장애인, 동성애자 혐오 -> 유엔과 유럽연합의 탄생
- 1990년대 이후 혐오의 확산
  - 유럽, 반이민정서 확대, 반EU, 극우파 약진
  - 영국의 브렉시트와 반이민정서 확대
  -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

---

# 한국사회와 혐오

- 해방 이후 좌익 척결, 반공주의, 반북이데올로기 (cf. 통진당 해산)
- 지역주의와 지역차별
- 장애인, 부랑인, 빈민, 감염인 등에 대한 격리와 배제 (cf. 국민 vs. 비국민)
- 2010년 이후 이주자/이주노동자 혐오: 반다문화주의, 이주자반대를 내세운 인터넷 커뮤니티 등장
- 2012년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소수자 혐오의 놀이화 (cf. 여성, 민주화운동세력,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호남, 세월호 등)
- 2010년대 이후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동성애운동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

## 혐오의 확산 경로

- 사회경제적 위기 → 불안과 공포심 → 자기이익과 안전에 대한 집착 → 가짜뉴스/음모론 → 집단주의 강화, 특권화 → 이질적 집단에 대한 거부감/적대성을 이용 → 타자화, 동료시민에 대한 혐오 정당화, 책임전가, 희생양 만들기 → 포퓰리즘 정치의 등장
- 역차별/불공정론: 소수자 집단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주장 (역차별, 불공정).
- 우파 포퓰리즘: '더 배제된 자'를 이용해 '덜 배제된 자'를 동원(김만권)

---

## 혐오표현 유형1: 멸시/모욕/위협

- 불쾌감 유발: “김치 냄새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 “동성애자는 유전적으로 돌연변이”, 원숭이 등 동물에 비유
- 역겨움과 상처: 히틀러 - 유대인 ‘해충’, 스탈린 - 독립자영농 쿨라크 ‘계급의 적’, 일본 - 재일코리안 ‘바퀴벌레’, ‘기생충’, 르완다 후투족 - 투치족 ‘바퀴벌레’
- 비가시화(정체성 부정): 이주자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프랑스에서는 발찌 차고 다니는 여성들을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니 발찌하고 다니지 말라”, “마이클잭슨이 백인처럼 하얘지고 싶어서 수술을 했다”, “정신병자들은 집에 있어라”, “내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다”, “퀴어축제 같은 거 안하면 안되냐”, “일본에 살게 해주고 있잖아! 너희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

---

## 혐오표현 유형2: 차별과 폭력의 선동

-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 네덜란드 정치인 Geert Wilders 사건 (2014): 지지자들에게 “모로코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냐 더 적었으면 좋겠냐”고 묻고, 지지자들이 “fewer”라고 답하자, “We’ll organized that”이라고 답하여, “racial discrimination”과 ‘inciting hatred’ 혐의로 기소가 됨.

---

## 혐오표현 유형3: 고정관념 강화

- 부정적 이미지 축적: 허위를 사실로 고착화 (예: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OO인종은 머리가 나쁘다. 김치녀, 김여사, 개념녀)
- 구분을 통한 열등화, 비정상화, 비주류화 (예: 여검사, 다문화)
- 순종과 적응의 강요 (예: 살빼라, 조신해야지)
- 비가시화 (예: 안보이는 데 있어라, 쿼어축제 안하면 안되냐)
- Janusz Korwin-Mikke 사건 (2017):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고 작고 덜 똑똑하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아야한다”
-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 대림동은 범죄가 많은 곳이다.

→ 표현 자체의 과격성과는 무관. 발화자 의도와 무관.

→ ‘사실’을 말하는 혐오표현?

\* 김지혜, 2017; 유민석, 2016 등

---

## 고정 관념의 표출

- 인종, 국적: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게으르다”, “조선족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휘두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 여성: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 “나서지 마라”, “집에서 애나 봐라”,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성은 얌전해야 한다”, “철학은 남성의 학문이다”, “철학과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여학생들 당연히 삼국지는 안 읽어 봤겠지?”, “여자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면 시집가서 어찌려고”,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쁜 옷이나 구경해 불행한 것”, “지하철에서 화장하지 말라. 프랑스에서는 몸파는 여성들이나 그렇게 한다”, “여자애들 공부하러 오면서 학교에 짧은 치마 입고 오는거 이해가 안된다. 그게 공부하러 오는 복장이냐.”, “이 나라 경쟁력은 출산율에서 나오는 데 요새 여자애들은 결혼도 안하고 아주 문제가 많아.”

---

## 고정관념의 표출: 스테레오 타입 (경향, 2017)

- **김치녀:** 과소비, 분수, 소비지향, 허영, 세속·물질적, 샤넬, 구찌, 명품백, 스타벅스, 성형, 청담동 며느리룩, 남성의존, 남자 무시, 어장관리, 데이트비용, 꽃뱀, 먹튀, 선물, 대접, 경제적 부담, 잘난 척, 이기주의, 도도.
- **이주민:** 시골, 노총각, 매매혼, 사기결혼, 어린 여자, 가난, 돈 벌러움, 투박, 목 늘어난 셔츠, 촌스러움, 몸빼바지, 까만 피부, 까무잡잡, 후줄근, 꺼려짐, 싹티, 악취, 향신료, 회칼, 범죄자, 청년경찰, 오원춘, 무법자, 동포, 장기매매, 중국, 동남아, 조선족, 이슬람, 연변사투리, 시끄럽다.
- **동성애:** 존중 강요, 성욕, 똥꼬충, 불쾌, 눈총, 중성적, 대머리, 위험.
- **맘충:** 기저귀, 김밥, 쏟음, 흘림, 고급유모차/커피숍, 뷔페, 브런치, 비상식, 억셈, 적반하장, 민폐, 뛰어다니다, 막장, 무개념, 새치기, 시끄럽다. 진상, 내로남불, 남편 욕, 시댁 욕, 기저귀 가방, 레깅스, 박시한 원피스, 안 꾸밈, 묶은 머리, 허름, 아줌마, 공공장소, 꿀보기 싫음, 극혐, 엉망, 부들부들.

---

## 재난과 혐오

- 편견과 혐오는 일상적인 시기에도 존재하지만 (cf. 인종주의), 위기 상황에서 더 폭발하는 경향이 있음.
- 편견과 혐오가 폭발하는 계기: 경제, 전쟁, 재난, 감염병
  - 1) 사회경제적 위기: 독일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유대인 혐오(홀로코스트), 유럽 복지국가 위기와 이주자 혐오, 미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이주자 혐오, 한국의 일베현상
  - 2) 재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일본대지진 이후 혐한 시위 증가 (노윤선, 2018)
  - 3) 질병: 스페인 독감과 외국인혐오, 표플리즘 (나치 집권) vs. 코로나19와 아시안/중국인 혐오, 민족주의 (Washington Post, 2020.3.23,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2020)

---

## 재난 상황에서의 혐오의 특수성

-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
- 재난의 책임을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계층에게 전가하거나, 낙인을 찍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위기의 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선동이 쉽게 작동하고, 혐오의 강도가 높고 확산속도가 빠를 수 있음.
- 집단 구성원 일부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그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돌리는 경향
  - 예: 특정 대학/고교/회사에서 집단감염시 보도 방법
  - 낙인 비교 사례: 수도권 vs. 대구, 개신교 vs. 신천지, 정규직 vs.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

## 코로나와 혐오/차별

“평등, 비차별, 포용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다” (UN, 2020)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혐오표현 대응은 포용, 연대, 공동의 인류애를 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에 대응하여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HCHR, 2020)

# 코로나와 혐오/차별

- 차별: 코로나19의 피해가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에게 집중될 수 있음. 사전에 예방하고 발병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OHCHR, 2020b)  
 예) 노인, 기저질환자, 장애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소수 인종, 소수 민족, 소수 종교인,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 국내실향민, 선주민, 시설에 수용된 사람, 수감자, 구금자, 성소수자 등
- 혐오: 코로나19의 피해가 낙인과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함.  
 예) 취약한 계층과 집단에 대한 낙인, 혐오, 폭력
- 하지만, 코로나 이후 혐오/차별은 계속 확산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중국인/아시아인 혐오, 중국에서의 흑인 혐오, 한국에서의 혐오 사례
- 차별과 혐오의 확산은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악순환.

## 코로나19 이후 혐오발언 언급량

유형	언급량(건)	비중(%)
장애인 혐오(애자 등)	594만 4004	69
인종차별(우한 폐렴 등)	186만 6249	21
성소수자 혐오(XX총 등)	43만 1437	5
여성혐오(기모찌 등)	24만 4968	3
신천지 혐오(사이비 등)	8만 6451	1
지역 혐오(대구 폐렴 등)	5만 9108	1

※올해 1~5월,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SNS 글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3009015&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3009015&wlog_tag3=naver)



\* 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4094520>

## 한국사례1) 중국인 혐오

-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76만 명 넘는 동의 (1월 23일)
-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 (인터넷 게시판, 댓글)
- 중국동포 밀집지역(대림동)에 대한 혐오 조장
-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

\* 혐오에 반대하는 언론보도 (한겨레신문, 2020.1.29)

상인들 “손님을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났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평상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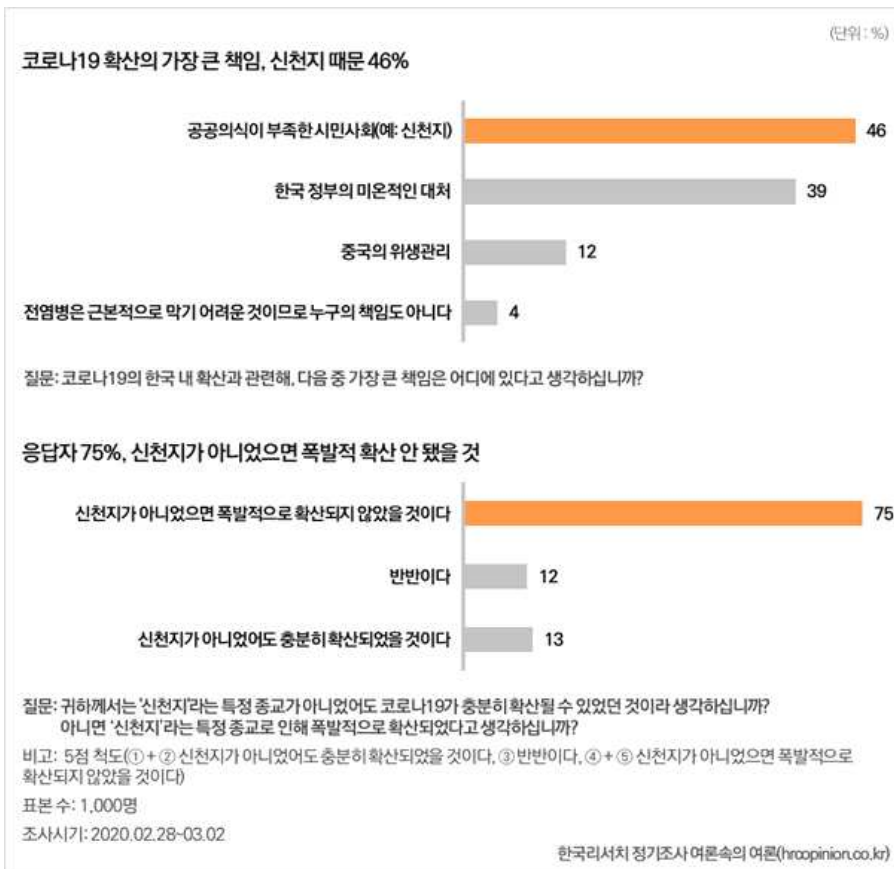
## 한국사례2) 신천지 혐오

-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 2월 18일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 대구 경북 중심으로 확산
- 4월 코로나 누적 확진자 1만명 돌파. 이 중 대구경북이 약 80% (철국 중증장애인 시설,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대구 달서구 아파트, 봉화 푸른요양병원 등)
- 신천지 교회 측이 행사 참여자 명단 제출 등에 있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정부/지자체의 강경대응 시작
  - 연말정산서류로 신천지 색출
  - 서울: 2월 21일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들에 대한 폐쇄조치. 신도 명단 확보 강제 시도 방침. 3월 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 발표. 3월 26일 신천지 서울법인 설립 허가 취소
  - 경기도: 신천지 예배당을 폐쇄하고 시설 신고를 요구했으며, 전수조사를 실시 방침. 2월 24일 경기도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 강제 폐쇄.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신천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25일 과천본부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 정부: 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신천지 교회 신속대응팀을 구성
  -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 고발. 5월 22일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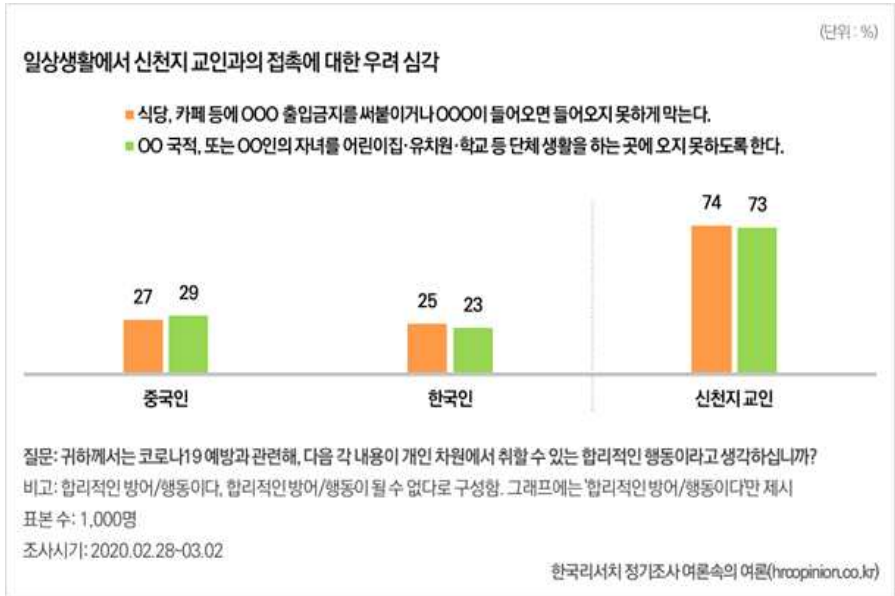
## 한국사례2) 신천지 혐오

### •시민들의 분노

- 신천지 신도 출입 금지나 접근 금지, 포교 금지 등
- 2월 20일 신천지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 2월 23일에는 동의자가 20만 명 초과. 이에도 신천지 압수수색이나 이만희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청원 쇄도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등의 개신교 교단은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통해 교주 이만희와 12지파장에 대한 구속 촉구
- 언론보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KBS <시사직격>,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 3월 여론조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5%에 달했고, 신천지 교인에게 혐오·차별 표현을 써도 된다는 응답이 63%



\* 한국리서치, 202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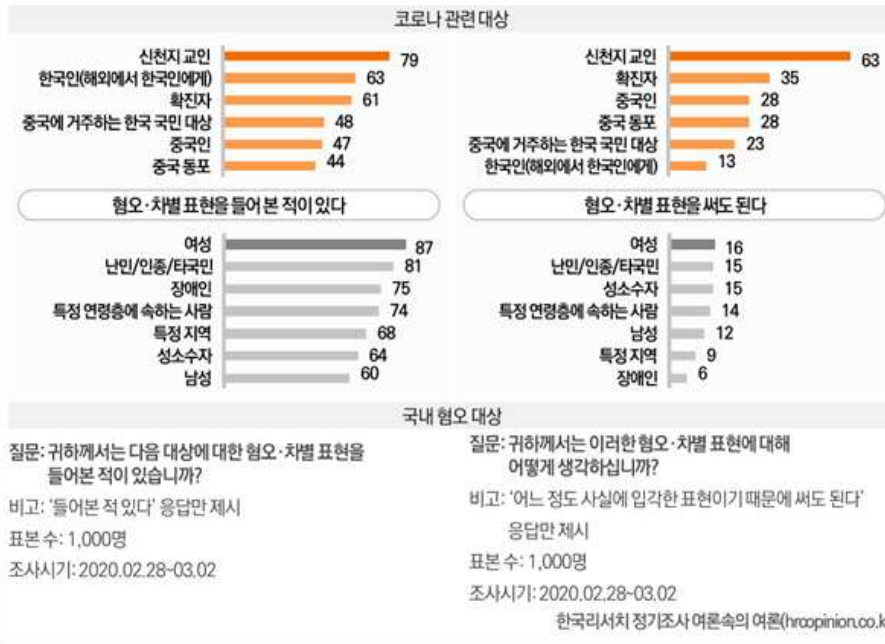
\* 한국리서치, 2020.3.25

## 한국사례2) 신천지 혐오 – 생각해볼 점

- 신천지 전체의 책임인가, 일부 신도의 책임인가?
- 신천지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특정 종교 자체를 악마화(반인류적 범죄 집단)하는 것은 정당화한 것인가?
- 중국인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와는 달리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는 전무
- 감염병에 걸린 확진자들을 향한 혐오와 낙인, 비난은 부당함.
- 신천지 특유의 포교활동의 문제나 종교적 이단성은 바이러스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일 뿐
- 신천지에 대한 혐오는 신천지 교도들을 움츠러들고 숨게 만들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

코로나 관련 혐오표현 다수가 경험, 코로나 혐오 옳지 않지만 신천지는 예외

(단위: %)



\* 한국리서치, 2020.3.25

## 한국사례2) 대구 혐오

-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대구·경북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했음: 대구 시민 전체를 코로나 확진자로 취급하거나 대구·경북에 코로나 확산에 책임을 돌리는 현상. 예) 'TK 코로나,' '대구 코로나'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 (민주당 청년위원)

대구 사람 좌석에 소독제 뿌린 사례 (한국일보, 2020.3.3.)

"대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역 혐오 (중앙일보, 2020.5.1)

-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것은 혐오와 차별, 배제"라고, 대구 시민들을 모두 확진자 취급하는 '혐오'를 멈춰 달라

---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성소수자 혐오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나 재난 국면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 유엔: 성소수자에게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일자리 상실의 위험 등이 더 클 것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낙인, 차별, 혐오표현 및 공격(Stigmatization,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attacks on the LGBTI community)을 경고 (OHCHR, 「COVID-19와 성소수자(LGBTI) 인권」)
- 유엔 사무총장: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려를 발표

---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이태원 사건

- 이태원발 집단감염: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연휴 기간 이태원의 몇몇 클럽에서 집단감염 발생. 5월 12일 100명 이상의 클럽발 확진자 확인
- 서울시: 5월 9일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했고, 5월 11일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연락을 취하여 검사 협조를 구하기 시작
- 방역 당국: 5월 14일 3만 명 이상이 이태원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밝힘
- 인천시: 5월 10일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 경찰: 5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CCTV, 카드사용기록, 휴대폰 GPS 등을 총동원하여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을 밝혀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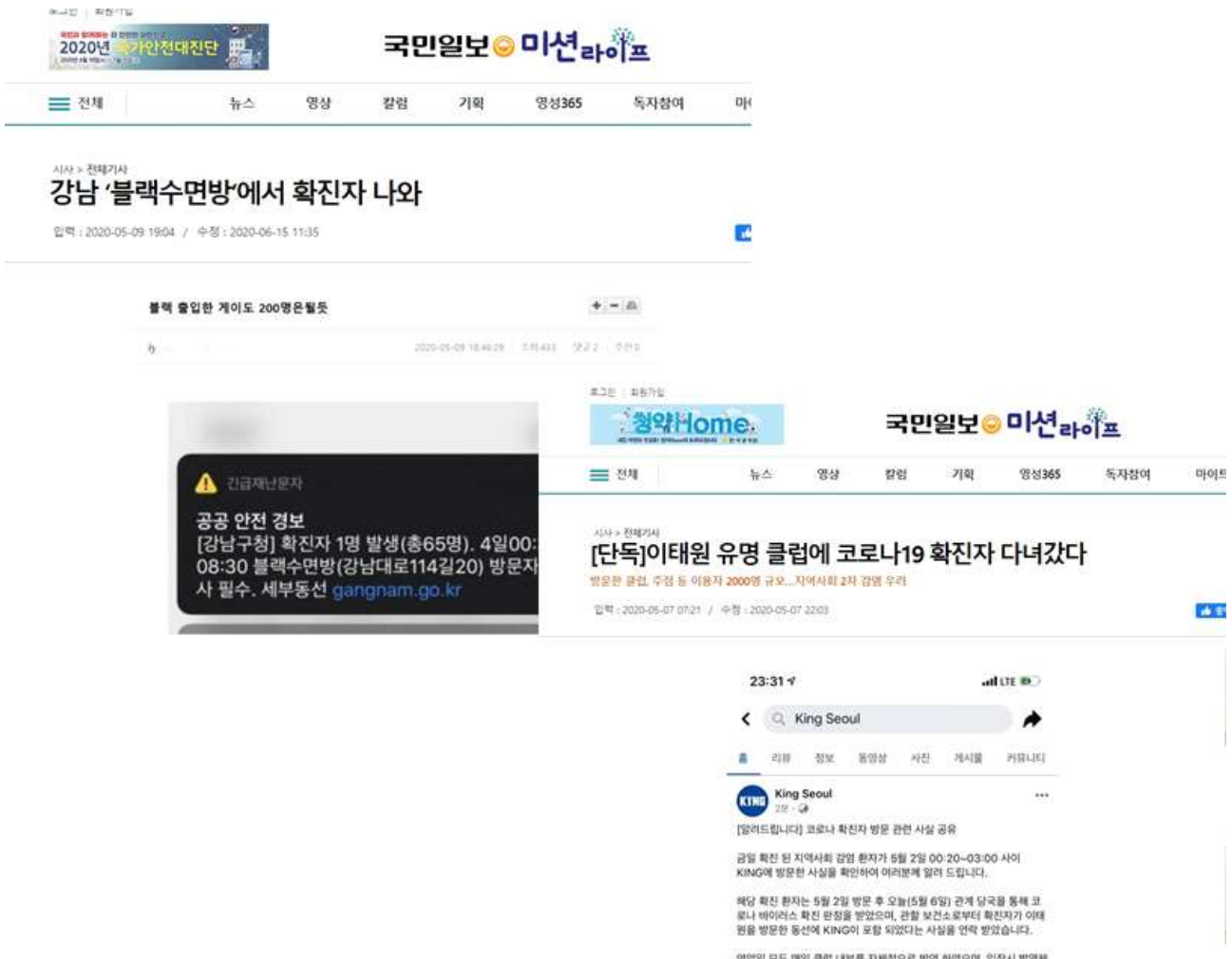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이태원 사건

- 일부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임이 알려지고, 일부 언론에서 동성애자를 특정하는 보도가 나옴.

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국민일보, 2020. 5. 7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국민일보, 2020. 5. 9

- ‘동성애는 정신병이니 중국처럼 금지·처벌해야 한다’
- ‘성 소수자 명단을 만들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외신: 성소수자 혐오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



---

## 한국사례4) 성소수자 혐오 - 대응

- 코로나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출범
-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소속 단체: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총 20개 단체, 2020. 5. 16. 기준) 등

---

## 한국사례4) 그밖의 혐오 사례

- 이주자 혐오, 확진자 혐오: 이주자의 경우, 중국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이주자 전반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 이주자 재난지원금 문제: 4월 2일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 제기(인권위\_했고, 4월 9일에는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국인 주민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사각지대로 ‘미등록 외국인’을 꼽으며, 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음. 6월 11일, 국가인권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권고.

---

## 혐오 반대 메시지

- 중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이다. 혐오의 시선을 거두어 달라. (교육부총리)
-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에 반대한다 (서울시장)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 (국가인권위원장)
- “배제와 혐오는 감염병과 싸우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
- “혐오와 차별 중이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장)
-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 대표)
-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고, 팬데믹의 위기에 차별, 낙인, 혐오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바이러스”(대통령 부인)

\* 혐오 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국민일보는 10년차 이하 57명 기자와 차장기자단이 차례로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

---

## 평가

-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인, 신천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시민사회와 방역 당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음.
- 코로나 국면에서의 소수자 혐오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차별과 혐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이에 대항하는 사회적·정치적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셈.

cf)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

## 전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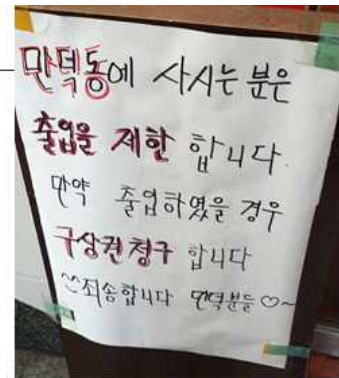
- 향후 혐오의 확산을 경계하는 것은 중요함.  
사례) 초기에 심각한 수준이었던 중국인 혐오는 중국 내 감염이 줄면 잦아들었으나, 6월 초 서울 중국동포교회 쉼터 거주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조선족 자체가 바이러스이자 공공의 적”이라는 식의 혐오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
- 소수자·약자가 (집단)감염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낙인과 혐오 확산.
- 앞으로도 이주자, 노숙인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 또는 취약계층·집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낙인과 혐오의 확산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함.

---

## 전망과 과제

-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음.
  - 실제로 혐오와 차별이 있는 곳은 감염병에도 취약
-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됨
  - 윤리적 이유 + 현실적 이유
-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포용과 연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역 대책
- 포용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코로나라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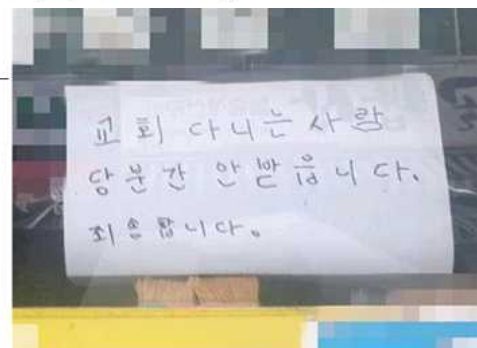
## 사례: 부산 만덕동



- 10월 2일 부산 만덕동 전국 최초 동 단위 코로나19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
- 만덕동 주민 출입금지, 매매계약 해지 등 만덕동에 대한 낙인
-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혐오와 차별입니다. 만덕동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결코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코로나19로 낙인찍혀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기섭 부산시의원)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21.33001005460>

## 사례: 기독교 혐오



- 사랑제일교회 사태 및 교회발 집단감염 이후 교회를 향한 혐오와 거부감 확산
  -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믿고 거른다”
  - “개독 집단이 K 방역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 “교회사람, 출입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 천만 신도를 가진 기독교(개신교)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혐오는 다수자 집단도 단 번에 소수자로 만들 수 있음.
  - 혐오 대상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21.33001005460>

---

## 혐오표현과 언론

- 언론의 특성: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혐오표현 확산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전파력과 파급력
- 노골적인 혐오표현보다는 편견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사실보도로 위장된 혐오표현의 위험성이 큼
- 신뢰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매체 특성상 고도의 주의가 필요함.

---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 총강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언론용 혐오표현 체크리스트 (인권위, 2018)

- 1.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특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과 묘사가 있는가?
- 2.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가?
- 3. 혐오표현 발화자의 사실 주장에 대하여 확인 없이 인용하거나, 중립적 기사 구성을 위해 찬반의견을 형식적 혹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가?
- 4.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향된 인상을 심어주는 제목, 사진, 삽화,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 5. 혐오표현을 직접 인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구성원의 심리적 고통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차별, 폭력 선동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명백한가?
- 6. 혐오표현 발화자의 지위, 동기, 배경, 영향력을 포함하여 혐오표현 발생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참고하고 있는가?

---

## 언론보도에서의 과제

-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언론의 책무 인식
-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것의 문제 인식: 기울어진 운동장과 언론
- 사실보도를 내세워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표플리즘적 선동을 하는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의 발언을 어떻게 옮기는 것에 최대한 신중해야 함.
-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혐오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 윤리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 필요
-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 팬데믹 시대 언론의 과제

커뮤니케이터와 공공 보건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낙인에 맞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DC, 2020.3.20)

<유엔 인권최고대표, 코로나19 관련 언론 대상 권고>

- 정부 혹은 그 밖의 행위자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오보, 허위정보, 차별에 대해 언론에서 선제적으로 보도함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을 적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상황에서의 차별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국가언론중재기구, 옴부즈만, 개별 언론기관의 공공편집자 등)을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확하고 편견 없는 보도, 사실 검증 활용, 고정관념 형성 방지, 인종, 민족, 국적, 종교와 같은 요소의 불필요한 언급 자제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시 가장 엄격한 윤리적, 직업적 기준을 준수
- 의료 인력과 과학자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은 상호 간 그리고 대중들과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인과 언론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보도를 포함하여 공포나 검열 없이 감염병에 대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홍 성 수  
sshong@sm.ac.kr

▣ 제 2 주 제

# 코로나19 보도로 본 공익과 인격권

유 현 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일이 터졌다, 일상이 바뀌었다...



# 일이 커졌다, 세계의 일상이 바뀌었다...



#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여자 들 (Stakeholders) 과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

Audience segments based on relationship to the emergency



People's needs and concerns are influenced by how close they are to an emergency.<sup>2</sup> The table on the next page shows some of the groups that need information in an emergency and their primary concerns.

건강한 삶의 해답을  
담담하게 찾아보는  
커뮤니케이션 탐구!

## 미디어와 백세시대

마침내 열리고 있는 백세시대.

미디어는 과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毒인가 이롭게 하는 藥인가?  
미디어는 과연, 한국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유현재 지음

(주)온한커뮤니케이션

포스텍 융합응용연구관 문명학 04

# 코로나 ing

우리는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송호근 외 지음

## COVID-19

코로나 팬데믹이 '문명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9명의 사회과학자가 전망하는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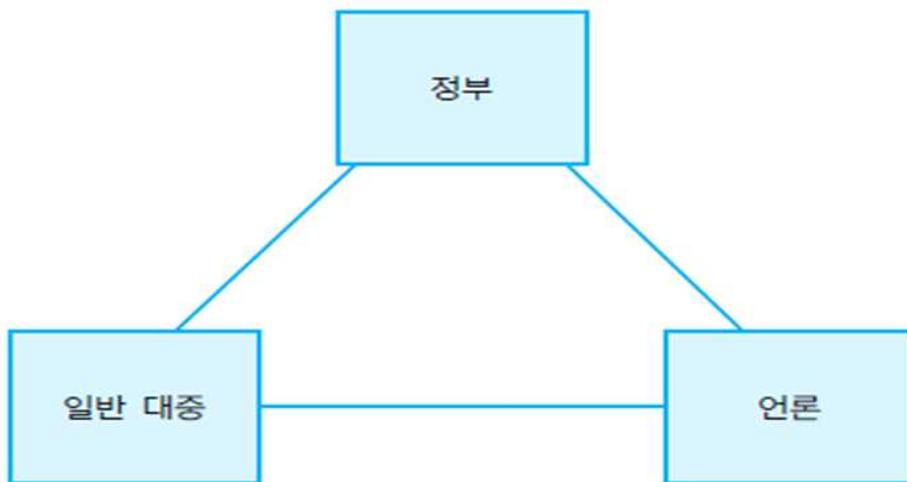
# 한국형 관여자 모델

<그림 6-4> 보건 위기 시 주요 관여자 및 책무



# 위기소통 (Risk Communication)의 핵심 주체

<그림 6-5> 보건 위기 시 주요 소통 주체



## 신종 감염병 위기와 한국사회의 위기 소통\*

COVID-19 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 \* 이 장에 포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2020년 2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한국사회의 위기 소통’ 세미나, 3월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코로나-19 극복 재난보도 특별 간담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사항들에 근거하였음을 밝힙니다.

HOME > 오피니언 > 유현재의 NOW 헬스컴

### 코로나19 변곡점, 언론의 ‘심리적 백신’ 희망하며

유현재 hyunjaeyu@gmail.com | 승인 2020.02.26 09:00 | 댓글 0

[유현재의 Now 헬스컴]

유사시 높아진 미디어 영향력, 생활자 시각의 공감 보도 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회가 임시 폐쇄됐다. 다시 문을 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 앞에 방호과 직원들이 출입자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유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을 기준으로 900명을 넘어섰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상황이 급속히 번져나가며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생업을 위협받으며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도 너무나 지쳐가고 있다. 보건위기가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주 꺼내지 않던 위기관리(Risk Management)를 이야기한다. 이 가운데 빈번하게 언급되는 영역이 바로 위기소통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물리적 방역 활동과 함께 심리적 방역으로서 국민소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심리적방역과 사회적백신은 언론의 몫”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위한 재난보도 개선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재난보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인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위기 소통(Risk communication)의 핵심은 공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입국 금지 속출’ 기사나 ‘유령도시’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기사, 전염병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기사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이라고 지적하며 “보도를 놓고 언론끼리 서로 싸우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현재 교수는 조선일보 특파원의 우한탈출기나 헤럴드경제의 대림동 르포, 아산·진천 격리 시설에 대한 지나친 내부 묘사와 도찰에 가까운 방송사 취재행태와 싸움 구경하는 식의 저널리즘 태도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기사를 쓸 때 얼마나 필요한 정보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잘못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해 오보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생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와 언론 모두 정확하지 않으면 용서받기 힘들다. 하지만 (오정보에 대해) 일본은 사과해도 언론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현재 교수는 또한 “방역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은 언론의 몫”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담을 나누는 식의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며 지금보다 더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먼저, 일부 언론조정신청 사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만원)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IT 사실/칼럼

**news 1**

###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20.03.07. 오전 11:12  
최종수정 2020.03.07. 오전 11:12

1 **펼쳐보기**



(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신속한 검사를 위한 대규모 선별검사센터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에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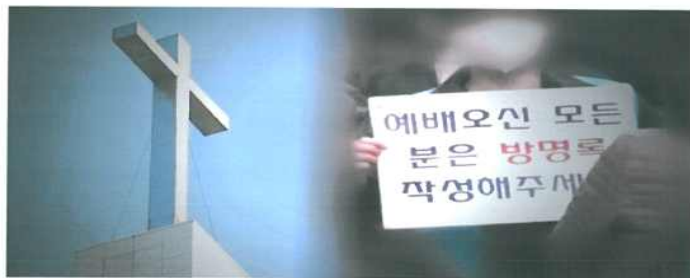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2020.3.7/뉴스1  
2expulsion@news1.kr

## 조정성립 (정정보도, 반론보도)

인생하기 취소

### 일부 교회 "예배할 것"...서울시, 현장점검 '경찰 동행'

[JTBC] 입력 2020-03-21 오후 4:43:25 수정 2020-03-21 오후 6:17:15



[앵커]

내일(22일)이면 또 일요일인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일 교회 예배가 열리는 곳을 찾아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고, 경찰까지 나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궁다습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집단 감염을 우려해 교회 현장 예배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교회를 입장을 달라 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지만 신도수가 한 명이 넘는 서울의 일부 대형 교회들은 일요일 현장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광림교회 관계자 : 예배는 드리는데요, 건강하신 분들만 오시면 교회 앞에서 연락처 누구인지 다 적

# 조정성립 (정정보도)

조선일보 2020-03-30 (월) A08면

##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

승인 안났는데 文 치적인양 발표  
업계 "작전 세력과 뭐가 다르냐"

정부가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가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기 위해 걸론이 나지 않은 FDA의 진단 키트 승인 건을 다 치러낸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관련 기업들 주식이 '테마주'로 언급되며 연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부론 발표로 관련 업체들의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도폭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

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씨젠·솔젠트 등 국내 업체는 FDA에 코로나 진단 키트의 EUA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발표로 일부 진단 업체는 접촉자 쪽으로 웹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다. 업계에선 "외교부가 주식시장에 무뎌 버리는 작전세력과 다를 게 뭐냐"는 말도 나왔다.

외교부가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국내 업체의 진단 키트 수출길을 연 것이 홍보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일부 업체가 진단 키트를 이미 미국에 수출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DA 승인과는 무관하다. 일부 업체의 키트는 미국 실험실 표준인증인 '클리아(CLIA)'를 획득한 미 연구소가 자체 판단으로 채택하면서 수출로를 열었다.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는 FDA 허가 없이도 일부 품목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국내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고 홍보했다가 계약 불참이 키트 일부인 수출 용기인 점이 드러나 '과장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석조 기자



#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회 > 사회일반

## 성소수자 전용 헬스장도 휴업... 주변 상인들 "불안해"

등록 2020-05-14 11:38:17

남성 동성애자 전용... 긴급휴업 돌입  
내부 130명 규모... 휴식공간 등 갖춰  
'휴게실', '탈렉스룸'에서 즉석안락도  
"지금 영업은 직황·고계 안전 위협"  
감염 예방 대응에도 인근 상인 우려  
"클럽 방문자, 헬스장 오면 어떡하냐"



[서울=뉴시스]박우성 기자 =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이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1. park20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성소수자들이 주로 찾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알장들이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긴급휴업에 돌입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 | 순위 | 사회                      | 스포츠/연예 |
|----|-------------------------|--------|
| 1  | 가수 다빈 "경미원 죽음 내본 데니.."  |        |
| 2  | 장례식장 영안실 침입 시선 끊나..     |        |
| 3  | '갯길' 문영숙, 피해여성 50여명에..  |        |
| 4  | 할말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공..     |        |
| 5  | 페이니즘 가르친 교사에게 '실형'..    |        |
| 6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사회적..      |        |
| 7  | 美 "야, 코로나19 연구 해장 시도.." |        |

### 기자수첩

- |  |   |
|--|---|
|  | 정준연 <b>최중훈, 결국 김형</b><br>기안장도 위독 건강가<br>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br>불법 촬영한 성관계 용역   |
|  | 김지현 <b>GP중계 의혹</b><br>방송 채우며 기조하나<br>지난 3일 강원도 철원군 비<br>무장단체(DMZ) 내 최전방 |

# 추가 사례들입니다 (알 권리, 공익, 인권 충돌?)

## 수집/분석



NAVER

신종 코로나



통합검색

뉴스

이미지

실시간검색

블로그

동영상

카페

지식IN

더보기

검색옵션

정렬

기간

영역

유형

언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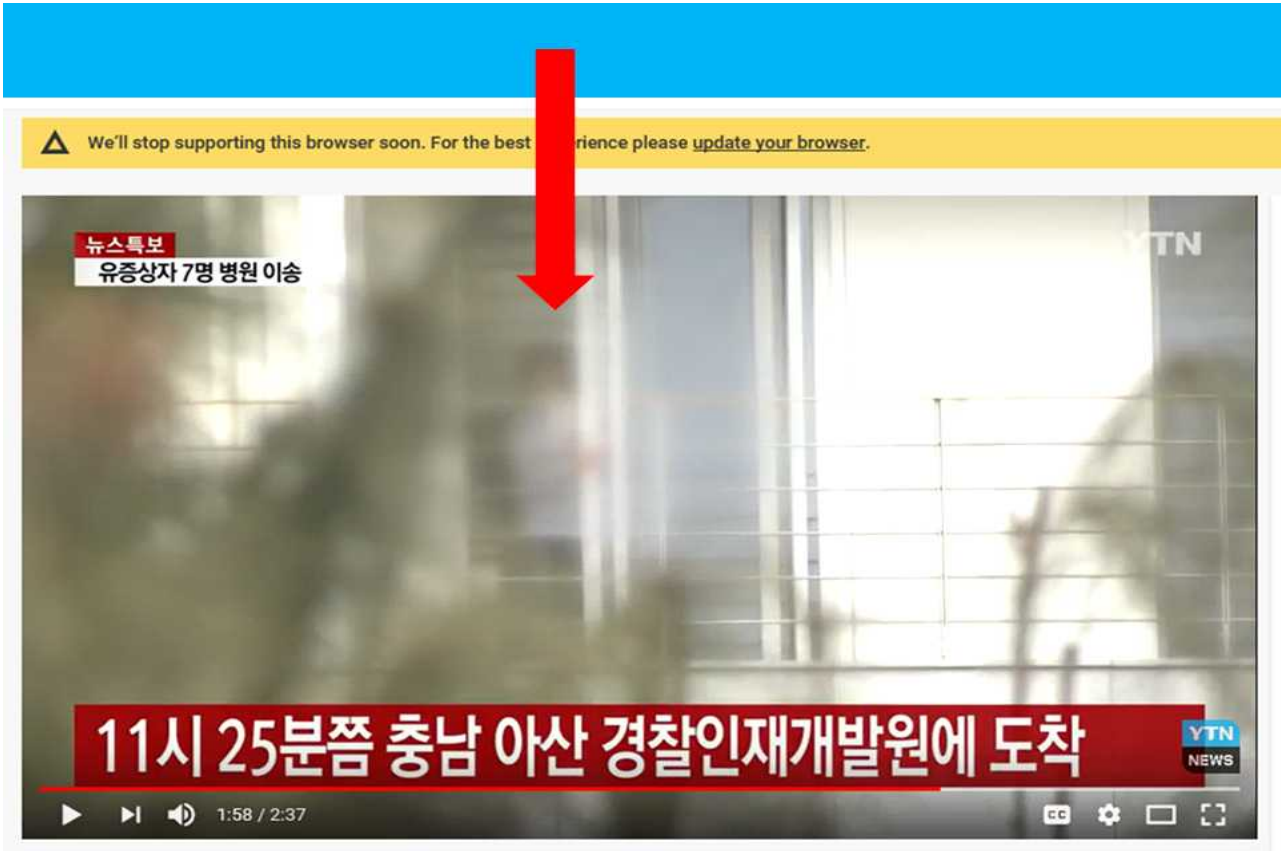
기자명

옵션유지

꺼짐

켜짐

상세검색







# Basic

# 인격권 (人格權)

“...권리의 주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서, 생명·신체·자유·명예·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명예 훼손,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  
다(스위스 민법 등)...”

# 인권 (人權)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  
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현행 헌법의 인권 규정을 보면-

- ① 행복추구권,
- ② 평등권,
- ③ 자유권,
- ④ 사회권,
- ⑤ 청구권,
- ⑥ 참정권 등이 있다....”

## 유현재 (2020) (공저.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

“...방역의 사전적 의미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이며, 영문으로는 “...prevention of epidemics (infectious disease), disinfection, quarantine, prevent an epidemic of,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정도로 통용된다.”

“... 방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태의 안정화에 물리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방역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져 위기 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포의 수준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공포감 형성을 우려하여 필요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 또한 불합리하다.”

“... 위에서 기술한 방역의 내용을 감안하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방역’ 개념을 떠올려 본다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대표적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다.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자주 접하며, 심지어 획득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투영하고 적용하는 언론, 미디어 콘텐츠의 역할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 방역인가, 인권인가? 알 권리인가? (충돌과 공존 사이)

### 감염병 보도준칙

#### 1.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가. 감염병 보도는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감염병 보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도 경정을 자제한다.

####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전문 분야나 의학적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해야 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예상은 했지만...

뉴스 1-10 / 3,619,489건

PICK 해당 언론사가 해당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관련도순 최신순 오라온순

검색결과 자동고침 시작



## 코로나19 재유행에 전국 7천175개교 등교 못 해... 또 최다 기록(종합)

연립뉴스 1시간 전 네이버뉴스  
전국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하루 새 18명 늘어...서울서 9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광주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등의 여파로 28일 전국 13개 시도 7천175개...

코로나19 재확산에 전국 7,175개교... 서울경제 PICK 2시간 전 네이버뉴스

코로나19 재유행에 전국 7천175개교... 연립뉴스 2시간 전 네이버뉴스



## 술판 '파티 개화'... 코로나19 발병도 뚫었다

파이낸셜뉴스 PICK 1시간 전 네이버뉴스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밤사이 제주 37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이미 해경인 일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됨...

“더할 거 티격” 코로나19 확진 제주 개... 연립뉴스 PICK 5시간 전 네이버뉴스



## 코로나19 여파 37일 신규 확진 400명 이하

차남A PICK 6시간 전 네이버뉴스  
코로나19 재유행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7천200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371명... 한국경제TV PICK 6시간 전 네이버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71명...17개... 광화일보 PICK 6시간 전 네이버뉴스

코로나19 신규 환자 371명...전국 17... 동아사이언스 PICK 4시간 전 네이버뉴스



## 【속보】 코로나19 여파 37일 신규 확진...지역발생 359명

한국경제 PICK 6시간 전 네이버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 늘었다. 하루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2보】 코로나19 여파 37일 신규확... 연립뉴스 PICK 6시간 전 네이버뉴스



## 이마트 창동점 폐쇄,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뉴스시스 53분 전 네이버뉴스  
이마트 직원 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점사와 방역 조치가 실시된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 이마트 창동점 출입구에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02.08. dahora89@newsis.com...

Ddjm 코로나19

통합검색 뉴스 블로그 백과사전 카페 지도 사이트 브런치 더보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세계 현황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일본 코로나19 첫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대구 코로나19 예방수칙 코로나19 단계 코로나19 부산

뉴스 정확도 · 최신 1-10 / 약 4,330,000건 관련뉴스읽기 검색옵션

기간전체 연론사전체 추가화



## 권남 거제 코로나19 확진자 하루에 4명 발생

2분간 프리서인 다름뉴스  
[서울선 기자(cycsgoole@naver.com)]경남 거제에서 하루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거제시는 28일 오후 5시 30분 3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어 거제시 연초전 하순마을에...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02.28.14시)

6분간 KTV 다름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02.28.14시)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박 건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장소: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 코로나19 확진자...



## 대구 동아에디빌링 347명 전원 코로나19 '음성'

3분간 뉴스시 다름뉴스  
[대구=뉴스시]아지연 기자 = 대구 동아에디빌링 직원과 환자 347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 대구시와 병행속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수송구 지산동 동아...



## 행사 운전기사인자 이장인 60대 코로나19 확진, 태안군 '초박살'

4분간 연립뉴스 다름뉴스  
크게 걱정하고 있다. 직원 특성상 접촉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소심업을 방문, 조원역과 식사도 함께 하고 종종 치료자...

특목 개인택시 운전기사 코로나19 확진, 지역사회... 6분간 목포시민신문



## 울산시,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순환 재택근무 시행

2분간 뉴스시 다름뉴스  
2주간 전체 직원의 20%를 순환 재택근무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전 재책 대응을 위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임선부와 민생물자 등...



## 【이슈】 '힙스엔'도 송중기도 핵기 들었다, 코로나19로 극강가...

10분간 일간스포츠 다름뉴스  
'힙스엔' 퍼스트 에이전트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9일 국장가는 다시 압축 속이다. 수도권 중 심으로 전국에 코로나19확산세가 찾아올지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 코로나19 재확산에 도심 유행 지점도 방역 긴장

15분간 직파넷코리아 다름뉴스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도심에 위치한 문화 지점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활동 경우 지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하는 것은 물론, 밀접 접촉 고각과...

# 쏟아진 위배 사례들



## 발길 끊긴 쇼핑몰·영화관...우한폐렴 공포에 유행도시로 변한 서울 상권

서울 강남의 대형 쇼핑몰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자 발길이 끊기고 있다. 9일 찾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 박용선 기자, 진상훈 기자 | 2020.02.09



## 우한폐렴 공포에 '유행도시' 된 서울... 휴일에도 쇼핑몰·영화관 텅텅 비어

9일 일요일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당가. 마스크를 쓴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다. 평소 점심시간에 줄을 서지 않으면 음식...

조선비즈 > 산업 > 기업 | 박용선 기자, 진상훈 기자 | 2020.02.09



## 19번째 확진자 다녀간 송도, '유행도시'로 변했다

"확진자 다녀갔던 소문 퍼지자 매출 70~80%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9번째 확진자(36세 한국인 남성)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유행도시'를...

사회 > 사회일반 | 황민규 기자 | 2020.02.07



## 서울지하철 5일간 226만명 뚝, 명동 백화점 매출 3분의1 토막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유행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

사회 > 사회일반 | 이해민 기자, 이지윤(연세대 UIC 경제학과4년) 인턴기자, 이영관(서울대 정치학과4년) 인턴기자 | 2020.02.07

# 쏟아진 위배 사례들

중앙일보 | 오마이뉴스 | 경지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스포츠

## 국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토목월드

### 오소리·코알라·사향고양이... '우한 폐렴' 발원지 中 화난시장 가계 차림표

[한겨레] 2020.01.23 09:39 | 2020.01.23 09:58



국제 |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토목월드

차림표에는 '산 야생 오소리 500위안(한 마리), 오소리 고기 45위안, 산 흰 코 사향고양이(한 마리) 130위안, 흰 코 사향고양이 고기 70위안, 산 대나무쥐 80위안, 대나무쥐 고기 75위안, 산 기러기 120위안'이 적혀 있다.

또 다른 가게가 내건 차림표에는 공작야생닭·고슴도치·여우·낙타코알라 등 각종 희귀한 야생 동물도 등장했다.

이 목록은 모두 야생 동물로 화난 수산시장에서 야생 동물들이 사육, 도살돼 식용으로 거래됐음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최초 발원지인 우한 후난야생동물시장의 화난(화남) 수산물도매시장이 21일 폐쇄되어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1  
2  
3  
4  
5  
6  
7  
8

# 쏟아진 위배 사례들

chosun.com 국제

지역 | 연재 | 인물 | 국제 | 구독 | 신청 |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룸 | 오마이뉴스 | 경지 | 사회 | 경제 | 국제 | 스포츠 | 연예 | 건강 | 문화 | 라이프 | 영상포토 | 콘텐츠 | 뉴스 | 오마이뉴스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도에도 없는 셋길로 우한 탈출... 우리 차 뒤로 수십대가 따라왔다

조선일보 박수진 특파원

일찍 2020.01.26 09:55 | 수정 2020.01.26 16:10

우한 폐렴 확산 박수진 특파원 우한 탈출기

봉쇄 발표날에도 빠져나가는 열혈

가자가 한 박스, 검문소 우회하며 비포장도로 다리를 좁힐로 이동



있습니다. 예약한 1월 25일 우한-베이징 비행권이 공공 안전상 현안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기간 변경을 원하시면...

지난 25일 오후 5시 중국 남방항공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실감한다. 이 도시에 갇혀 있다는 것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한에 도착한 건 22일 아침이었다. 25일 도시를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한시 방역지휘부는 25일 새벽 0시 10시부터 대중교통을 중단하고 비행기 이착륙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전국 발표했다.



국제 주요뉴스

특별한 양식 관련... 영회합장 후 다급 결수

국제사태에 대응을 위한... 국제사태에 대응을 위한... 국제사태에 대응을 위한...

YTN | 분야별 뉴스 | 위클리뉴스 | YTN Star | 프로그램 | 리뷰 | 재보

### 중국 방역체계 우회한 기자... '우한 탈출기' 칼럼 논란

Posted : 2020-01-29 08:17

우한 폐쇄 검문소 우회 셋길로 나온 조선일보 기자, 문제성 기사



# 그래서...

“감염병 보도 무엇보다 정확해야...가이드라인 논의 필요”

‘감염병명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

· 연합뉴스 기자 2020.03.14 10:06:2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보도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감염질병 보도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감염병 보도'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뉴스홀 > 경제

## 방통위, 코로나19 극복 재난보도 간담회 개최

Posted : 2020-03-05 16:19



# 준칙 속 인권, 인격권?

## 감염병 보도준칙

### 1.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가. 감염병 보도는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감염병 보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도 경정을 자제한다.

###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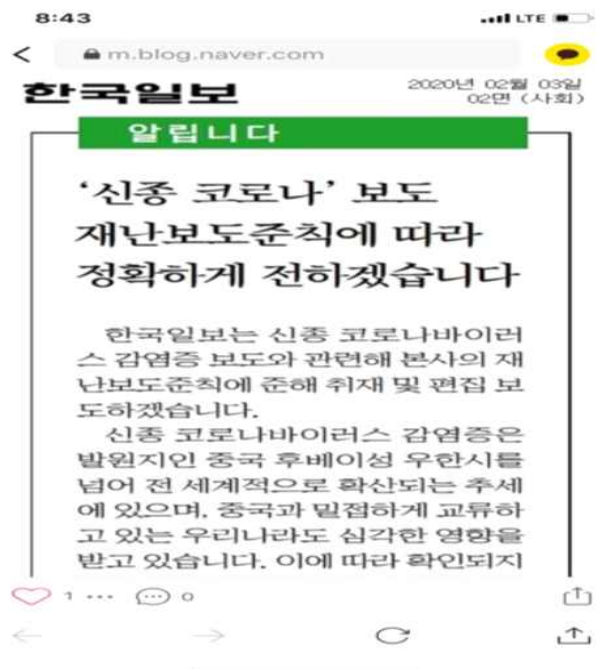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전문 용어나 의학적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해야 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4월 27일, 진일보

## ‘감염병보도 이렇게 하라’ 준칙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제정, 언론재단 후원... 피해야할 표현, 추측성 과장기사 지양 등 원칙 담아

장승기 기자 wit@mediatoday.co.kr | 승인 2020.04.27 11:54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의 후원을 받아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와 함께 ‘감염병보도준칙’을 제정했다.

감염병보도준칙은 전문과 기본원칙, 권고사항, 별첨, 부칙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에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재난보도와 구분되는 준칙을 만든 것이다.

[관련기사: 이런 코로나 기사는 ‘TMI’]

전문에선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며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며 준칙 제정의 목적과 다짐을 담았다.

기본원칙은 7개로 구성했는데 취재와 보도할 때 기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담았고, 권고사항에선 기자들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보건 당국의 특별대책비에 언론인을 포함...



## 관행과 경쟁은

## 결국,

## 침해를 만든다?

HOME > 미디어 > 포커스 > 미디어포커스

### 메르스 혼란, 언론은 책임 없다

장미애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5.06.09 17:50 | 댓글 0

여류장, 실경남시 여전... 감염병 보도원칙 준수는 만나라 예기

[더피알=김미혜 기자]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게 된 데에는 대국민 소통이 미흡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관련기사: 메르스 공포, 맹장식 커뮤니케이션이 원인)

조기 상황을 통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보건당국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유언비어를 키운 꼴이 됐다. 유사시 정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화(禍)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 과도한 취재, 격리자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

YouTube KR 아산 진천, 시설 내부

우한 교민이 올린 격리시설 내부

## 1인 1실 약 6평

샤워·손빨래 가능

Play (k)

0:31 / 1:49

#오션민기자 #우한교민 #격리생활  
독방 쓰고 식사도 방에서...교민이 올린 '격리시설 생활' / JTBC 뉴스룸

## 추적 저널리즘 (Chasing Journalism)?

KBS11

KBS NEWS

1:38 / 1:53

## 과거 사례. 주제는 달랐어도



## 어그로 위주의 관행과 침해 가능성

남성이 여성보다 신종코로나 잘 걸릴까?

**1100만? 1400만? 우한인구 미스터리**

수술용 '덴탈마스크' 신종코로나에 효과 없다

우한 폐렴 확산에 현직 의사 "살아있는 박쥐로 뭔가 했을 것으로 추정"

**"우한폐렴, 중국의 신종 생물학 무기"...음모론 확산**

우한 [뉴스터치] 中서 15초 전파 의심 사례...확산력 강한 신종 코로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숨기나..텐센트 90배 넘는 2만명 표기 논란

## 특정 그룹에 대한 선입견 조성?

[뉴스터치] 中서 15초 전파 의심 사례... 확산력 강한 신종 코로나

입력 2020-02-07 07:25 | 수정 2020-02-07 07:25

🔍 🔍 🔍 🔍 🔍 🔍 🔍 🔍 🔍 🔍



## 과도한 일반화, 낙인 부여 가능성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전문가 **괜찮아! 대신보니까!**

f 🐦 📺

🔍

☰ 뉴스 오피니언 재테크 부동산 라이프 연예 문화 스포츠 지역뉴스

📺 토토 증권방송 PDF지면



**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챙기세요!**

중년남성의 잘못된 고민해결! 그 풍격을 세운 '리얼맨'이 남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김재철(56세)씨는 부



프리미엄링크

광고안내

사회일반

**[르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새번개 즉석 마스크 사재기 흥행**

추천검색어 | #봄나들이 #가족나들이 #미세먼지피하기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광고플랫폼 **ACE Trader**

이번 주말 여행지는 어디?

가족여행지, 고민하지 말고 **클릭!**

LGU+

TMA 가고싶은 사람!

# 언론 상호 간 지적 양상

뉴스의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



All 미디어 오늘 Beta Top Shop 구독 PLUS+

## ‘대림동 르포’, 대림동에서만 보이는 풍경이었나

헤럴드경제 대림동 르포 중국혐오 부추겨... 조영관 변호사 “언론, 국적 언급할 때 낙인효과도 고민해야”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모습을 위협인 것처럼 묘사한 게 문제다. 기자에게 이런 이슈의 이상의 풍경이 왜 허풍이



## 정보의 전달에만 치중, 역효과



### "코로나 매장 아니에요"... 부정확한 확진자 동선공개에 애꿎은 피해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2020.02.04 15:08



실시간 금상송 8.6초

- ▲ 서장훈 꼬마빌딩, 임대수익 폭도 '연 12%' 번다 433
- ▲ "후쿠시마 재앙 보는듯" 아베에 등 돌린 日 여론 385
- ▲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주해

## 적극적, 공익적 저널리즘 실종



[\[신종코로나\] 5번 확진자 26일 지하철 두번 이용...정부, 이동 경로 수정](#)

마주경제 | 2020.02.0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을... 이렇게 되면 5번 확진자가 27일 오후 방문한 곳은 식당 문암동떡볶이, 슈퍼마켓인 두꺼비마트와 럭키마트 등...



[\[동선 공개\] 서울·군산·부천·강릉...신종코로나 환자 어디갔나](#)

중앙일보 PICK | 2020.02.02. | 네이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환자가 15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두꺼비마트·럭키마트(서울 성북구) -1월 28일 예뽀레뷰티라인(서울 성북구) → 버스 → 가락홈마트(서울...



[질본, 5~11번째 환자 상세 동선 공개...교회·마트·음식점 등 포함](#)

전자신문 PICK | 2020.02.01. | 네이버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5~11번째 환자... (두꺼비마트, 럭키마트) 이용했다. 28일에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속소에 머물다 버스를 타고 서울시 중랑구...



↳ 국내 신종 코로나 12명 확진·70명 검... 데일리한국 | 2020.02.01.

↳ 5, 6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충청리뷰 | 2020.02.01.

↳ [신종코로나] 5번 확진자, 선녀보살... 마주경제 | 2020.02.01.

관련뉴스 16건 전체보기 >



[\[신종 코로나 업데이트\] 5번째 환자 이동 경로 추가](#)

MBC | 2020.02.04. | 네이버뉴스

한국 2월4일 14:00 기준, 확진자 1명 추가돼 16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두꺼비마트, 럭키후레쉬마트\*) 이용 - (1월 28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미용시설(예뽀레뷰티라인) 이용, 이후 버스를...



[\[르포\] "여기 대학가 맞아?" 신종코로나 여파...'성신여대 거리' 적막감](#)

# 일부, 대안 제시



WHO

#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

## Background

Disease outbreaks are inevitable, and often unpredictable, event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an outbreak is unique in all of public health. Outbreaks are frequently marked by uncertainty, confusion and a sense of urgency. Communication, generally through the media, is another feature of the outbreak environment. Unfortunately, examples abound of communication failures which have delayed outbreak control, undermined public trust and compliance, and unnecessarily prolonged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turmoi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elieves it is now time to acknowledge that communication expertise has become as essential to outbreak control as epidemiological training and laboratory analysis. But what are the best practices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often through the mass media, during an outbreak?

## Guidelines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during outbreaks

In early 2004, WHO began an effort to construct evidence-based, field-tested communication guidance that would promote the public health goal of rapid outbreak control with the least possible disruption to society.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was an extensive review of the risk communication literature. During this process, WHO identified risk communication components which had direct relevance to outbreaks. Then, this body of material was distilled into a handful of features strongly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effectiveness or, when lacking, strongly associated with failures. Finally, these few features were assessed by outbreak control experts from a wide variety of cultures, political system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extensive review, filtered through a broad practical assessment, is a shortlist of outbreak communication best practices. They are listed below.

### 1. Trust

The overriding goal for outbreak communication i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in ways that build, maintain or restore trust. This is true across cultures, political systems and level of country development.



- a. The consequences of losing the public's trust can be severe in health, economic and political terms. Abundant research and prominent public health example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less people trust those who are supposed to protect them, the more afraid the public will be and less likely they will be to conform their choices and behaviour with outbreak management instructions.
- b. Senior management must endorse this goal but winning their support for specific trust-building measures faces many practical barriers.
  - i. This is because these trust-building measures are often counter-intuitive (such as acknowledging uncertainty or avoiding excessive reassurance).
  - ii. Consequently, building trust internally between communicators and policy-makers is critical. Trust is also essential between communicators and technical outbreak response staff who may not see the need of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especially if it means diverting them from other tasks. This internal relationship – between communicators, technical staff and policy-makers – is sometimes known as the "trust triangle".
    - It is important that the trust triangle be established before it is needed. This can be complicated because different stakeholders, perhaps represented by different ministries, may have conflicts of interest which will require consensus building among partners.
- c. Trust in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is critical in both directions. Evidence shows that public panic is rare and most rare when people have been candidly informed. But the extent to which outbreak managers trust the public's ability to tolerate incomplete and sometimes alarming information influences communication decision-making and effectiveness.
- d. Mechanisms of accountability, involvement and transparency are important to establish and maintain trust, and they are especially important to slowly rebuild trust after a crisis.
  - It is important that the trust triangle be established before it is needed. This can be complicated because different stakeholders, perhaps represented by different ministries, may have conflicts of interest which will require consensus building among partners.



##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 Communicating During an Outbreak or Public Health Investigation

Abbigail J. Tumpey, David Daigle, and Glen Nowak

### Background

#### Evolving Outbreaks and Evolving Communication

Before an outbreak is recognized and an investigation begins, limited numbers of persons might be exposed to health risks without experiencing illness. As increasing numbers of persons are exposed to the risk or become ill, healthcare providers and others might become aware of the higher than expected number of illnesses and begin reporting the unusually high occurrences to local and state health authorities. This situation is often what prompts an outbreak investigation, and as that outbreak evolves, communications about it must evolve as well (1,2).

In today's 24 hour news and digital media environment, people constantly receive information from many sources, ranging from print media to television to alerts and social media on mobile devices. Immediately after the news media or community learns of a public health-related outbreak investigation, they want to know what is happening and who is affected. When the cause is rare but might cause substantial harm, news outlets often treat the event as breaking news and begin sustained coverage. From the beginning of an event to its resolution and follow up, public health authoritie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news media with timely, accurate information and answers about the outbreak's effects.

### Box 12.2

#### Communication Resources and Tools Often Used for Outbreak Responses

- **Internet site.** The response effort might need an Internet site to convey relevant and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bout the outbreak. The site should be the main repository of scientific facts, data, and resources. All other communic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content of that site. Key information for the site might include the following:
  - Data or case counts;
  - Maps of the affected area;
  - Guidance for affected populations, the public, travelers to or from the region, and healthcare providers who are caring for the affected persons;
  - A section highlighting the newest information; and
  - A multimedia section for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 **Call center.** The response effort might benefit from having a call center equipped to answer inquiries from the

#### Effective Messaging During Outbreak Responses

Messages must resonate with affected populations before those persons will follow prevention recommendations. Box 12.3 outlines these key messaging development components in seven steps.

1. **Start with empathy.** Whether you are speaking to affected persons, community groups, or the media, start by expressing empathy. Acknowledge concerns and express understanding of how those affected by the illnesses or injuries are probably feeling. Recognize orally and in written materials that persons are anxious or worried and that you, too, have concerns. Demonstrate that you care and are working to understand their perspective.
2. **Identify and explain the public health threat.** Detail what you know about the situation (e.g., what is causing the harm, who is at risk, and what causes someone to be at risk). Provide advice that includes action steps for preventing harm or getting help. Persons affected by the situation might feel fear, loss of trust, and lack of control. Acknowledge uncertainties and do not over-reassure or overpromise.
3. **Explain what is currently known and unknown.** Provide specific details and timelines. Admit when information is not yet known. Explain what you are doing to learn more, and provide a timeframe for checking back in or when confirmed results are expected. During the early stages of an outbreak or investigation, you might have limited information to provide, which can be acknowledged by saying, for example, "We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share with you yet, but we are working to find the answers you need." Explain what is being done to minimize risks and harm to affected or potentially affected populations.
4. **Explain what public health actions are being taken and why.** Be prepared to describe which agencies are involved in the response, their roles, and their responsibilities. Also identify the investigative steps, actions being taken, or actions that are not being taken and why not. Say, for example, "We are not evacuating the area because people can safely shelter in place." When discussing public health actions, share dilemmas in the decision-making and foreshadow possibilities that can occur during the outbreak.

## 감염병 보도준칙 추가 항목 제언

〈언론의 심리적 방역을 위한 신종 감염병 보도 관련 5개 추가 준칙〉

1. 정파성의 유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신종 감염병 극복과 국민 보건 안전 측면에서 기사와 보도를 생산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2. 추적 저널리즘의 경계: 경마 저널리즘을 넘어선 추적 저널리즘 *chasing journalism*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자제를 희망합니다.
3. 가짜뉴스 전달 역할 자제: 보건 위기일수록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가 전달할 경우 대중은 더욱 믿기 쉽습니다. 자제를 희망합니다.
4. 정보의 가치 판단 부탁: 보건 위기를 견디고 있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5. 사회적 낙인 유의: 보건 위기에서 가장 급한 것은 방역이며, 특정 계층·인물·대상의 비난은 낙인으로 이어져 방역에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유념을 희망합니다.



서강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SHC Sogang Health communication Center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bus89@sogang.ac.kr

# 지 정 토 론 문

토론자 : 권태훈(SBS 기자)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장)

최명진(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 정책토론회 토론문

권태훈 SBS 기자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과정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기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3개 단체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 정도의 논의를 거쳐 보도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가 만들었지만 발표하지 못했던 감염병 보도준칙 초안을 바탕으로 첨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 그동안 언론의 과장, 추측성 보도는 늘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발병 때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가이드라인이든 준칙이든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성과물이 일단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 주축이 돼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 초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련된 지침을 즉시 발표하지 못하고 추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회까지 합류하게 된 이유는 기자들이 보도준칙을 얼마나 인지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즉 실효성의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 통제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3개 기자단체가 나서서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보도준칙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감염병 관련 기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표현과 사실 보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월간의 회의 과정에서 늘 제기됐던 반론은 “언론이 이렇게라도 과장해서 떠들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피해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였습니다.

보통 학자나 전문가 그룹은 100% 가까이 확신하지 않으면 말을 아깁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 집단의 발표는 항상 신중하면서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희귀 전염병이 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부나 전문가가 원인을 분석중일 때 가장 안전하게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 발표를 기다려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상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추측성일지라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론이 보도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가장 괴롭혔던 고민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유현재 교수에 대한 질문>

1) 흔히 언론의 주요 기능으로 정보 전달과 함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꼽습니다. 요즘에는 정보 전달보다는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견(watch dog) 역할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위기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물리적 방역과 함께 심리적 방역 표현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방역의 주체가 과연 언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심리적 방역이라는 말 속에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괜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를 포함해 전문가 그룹이 실체를 확인하고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은 심리적 방역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심리적 방역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일정부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부와 전문가 발표에서 감춰진 것은 없는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없는지 등에 대한 감시견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은 언론의 몫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미디어 오늘에 기고하신 내용 중에 “재난 상황에서 위기소통의 핵심은 공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면서 “언론의 반복적이고 경쟁적인 기사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뿐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유 교수께서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 공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추측성 보도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언론의 자기검열’ 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부 시절 때 처럼 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검열은 당연히 거부돼야 하지만, 언론 스스로 기사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특파원의 우한탈출기, 헤럴드경제의 대림동 르뽀, 아산/진천 격리시설 내부묘사 등의 기사가 과연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면, 표현 등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되어야 할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4) 과도한 경쟁 취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방송사의 추적 저널리즘이 때에 따라서는 사실 전달보다는 뉴스를 오락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제언 가운데 첫 번째로 언론의 정파성 유보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제언 항목 가운데 4번째로 정보의 가치 판단을 부탁하셨습니다. 제안의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언론이 있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은 과장 보도보다 더 위험한 자기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자가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언론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수 교수에 대한 질문>

인권, 혐오와 차별반대, 사회통합, 평등, 다양성 존중, 사회적 약자보호와 같은 대명제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대중적 선동 정치인들의 말을 따옴표로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위험성도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1) 혐오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마저 부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거부감은 일종의 이질성에 대한 자기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제시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더라도 종교의 정치화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마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부감은 건전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견제 도구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오와 거부감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혐오표현과 언론>에서 언론이 편견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사실보도로 위장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부 언론의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 시민사회 유지를 위한 감시 표현까지 혐오로 분류하고 게시지는 않습니까?

3) 혐오현상은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사회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고, 공감이 확대되면 언론을 통해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언론의 본령이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상의 특이성이나 비판적 시각은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차별과 혐오, 인권의 패러다임

“딱 쥘 주먹을 억지로 펴려 하지 마십시오.”

모택동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혐오는 사전적으로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감정”을 의미한다. 혐오를 그저 개인의 인성, 기호 또는 주관적 감정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혐오의 본질적 특성을 놓치게 되고, 그것의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이나 파장, 나아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모색은 더더욱 숨겨지기 마련이다. 인간이 본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또 개인의 인성, 기호와 감정도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사회관계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혐오는 명백히 사회적 현상이다.

### 1. 혐오의 사회적 배경

계급사회에서 사회관계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이다. 특히 국민국가는 끊임없이 (외부와)분리와 배제, 경계와 구획을 통한 (내부의)통합을 도모한다. 의도적으로 기획된 이러한 사회적 차별화(불균등화)는 자본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 전제이다. 차별이 구조화된 격차사회에서 사회관계는 특히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는 ‘구조’로, ‘구조’는 다시 ‘관계’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착화된다. 권력관계의 규정력은 차별의 구조화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격차사회는 차별을 정당화함으로써 권력관계를 유지·확대·재생산하고, 또 확대된 권력관계를 통해 차별을 더욱 구조화한다. 효율과 속도, 경쟁에 의한 성과 중심의 사회는 차별을 불가피한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차별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다. 그 파괴란, 외부에서 강제되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 스스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권은 근대의 기획이다. 근대의 인류는 시민을 주권자로 선언하고 그 존엄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재구조화를 꾀했다. 이것이 인권의 역사적 발전단계로서 시민권의 요체이다. 주권자인 시민의 정치적 비판과 참여, 사회적 자율성을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근대 국민국가는 동원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호명함으로써 시민을 해체하였고, 시장(市場)은 ‘개인’을 호명함으로써 사회를 해체시켰다. 따라서 인류의 야심찬 시민권 구상은 오늘날 고작해야 국가의 ‘통치권’으로, 또는 사회로부터 이탈된 ‘개

인의 권리'로 각각 전락되고 말았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체제에서 국가와 시장의 기획은 시민권의 총체적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인간 존엄성의 가장 큰 위협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아닌 국가와 시장이다. 국민국가는 통합을 명분으로 주체(주권자)의 외부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시장은 효율을 명분으로 주체(주권자)의 내부에서 차별을 정당화한다. 신자유주의체제에서 고립되고 파편화된 개인은 강제와 동의를 통해 시민적 저항력을 상실하고, 경쟁과 효율을 내면화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계층상승 가능성이 봉쇄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수록 누적되는 사회적 하층민의 우울증과 피해의식의 분출이 엉뚱하게도 기득권층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해 극단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실현불가능한 성공신화를 상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성공한 자', 기득권층에 대한 열망을 자기동일화 해, 기득권층을 선망하게 되는, 이른바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 분열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격차사회에서 주체의 사회적 존재양태는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 나타날 뿐이다. 승자든 패자든 '주체 없는 주체', 소외된 주체인 매한가지이다. 소위 일베, 가스통이나 어버이연합, 일부 기독교의 성소수자혐오 등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모든 사회현상은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의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는 늘 대상의 그늘 속에 숨겨진다. 주체의 소외가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사용'이 '교환'으로 치환되고, '가치'는 '가격'으로 대체되며, '이용'은 '소유'로 왜곡된다. 주체의 소외는 자기실현이 무화(無化)되는 만큼 배설의 비상구를 찾기 마련이다. 차별구조에서 권력관계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왜곡은 물론, 나아가 주체 스스로도 소외되고 마는 '주체의 왜곡'까지 초래한다. 특히 체제와 권력은 이데올로기적 강제와 동의를 통해 혐오를 소극적으로는 방조, 적극적으로는 조장함으로써 통치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혐오주체 또한 어느 한 측면에서는 '동원됨으로 인해 스스로 소외된 자', 즉 피해자일 수도 있다. 혐오문제에 대한 정의론(正義論)적 접근은 자칫 이런 구조를 간과한다. 혐오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부적절하거나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포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혐오주체에 대한 징벌적 규제, 즉 입막음과 처벌 일변도의 대응은 인권적 대안이 아니다.

## 2. 혐오발현의 구조

혐오(hatred)는 대개 증오(憎惡 enmity)와 경멸(輕蔑 contempt)로 표출된다. 쇼펜하우어는 "증오는 가슴에서 나오고, 경멸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에 의하면, 증오가 인간의 선형적 도덕감정의 발현이라면 경멸은 합목적적 의식의 발현인 셈이다. 증오에 비해 경멸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생성된다. 한편 권력관계 속에서 증오와 경멸의 발화방향은 서로 다른 쪽을 향한다. 증오는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상을 향하는 데 반해, 경멸은 비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상을 향하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증오는 약자인 주체가 강자인 대상을 향해, 경멸은 반대로 강자인 주체가 약자인 대상을 향해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오는

주체보다 대상이 문제상황에서 주동적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경멸은 문제상황에서 대상보다 주체가 더 주동요소로 작용한다.

증오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공격성이 표출되며, 그 적대성은 적극적으로 대상의 부정(否定), 소멸, 제거로까지 이어진다. 경멸은 소극적, 방어적 기제 속에 대상과의 관계설정에서 회피, 무시 등 주체의 선택여지가 존재한다. 증오는 도덕감정으로 정당화되는 반면, 경멸은 도덕감정으로 인해 그 발현에 주저(躊躇)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체제는,

첫째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랄 수 있는 경멸조차 마치 인간의 본성적인 도덕감정인 양 증오로 변환, 통합시키고(다른 것, 낮은 것, 싫은 것을 부정한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그럼으로써 마치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집단)인 양 착란(錯亂)시킨다.

셋째 혐오가 주로 경멸보다 증오로 발현됨으로 인해 한층 더 집요하고 적대적,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넷째 이 과정을 통해 정작 권력관계나 차별구조는 은폐되고 ‘민민갈등’으로 환원되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 괴롭힘(=경멸)에 따르는 주체의 도덕적 하자를 말끔히 세탁(洗濯)해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해자는 늘 당당하며 억울하고, 피해자는 늘 염치없고 죄송하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작동도, 따지고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경멸이 증오로 둔갑하면서 혐오주체의 사회적 약자 괴롭힘에 따르는 도덕감정 상의 망설임, 멈칫거림, 갈등이 소거되는 한편, 한층 더 집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작 장애를 둘러싼 권력관계나 차별구조는 은폐된 채 ‘공리주의적 효용론’으로 대체되고, 따라서 차별과 배제는 수평적 민-민갈등으로 왜곡된다. 피해자는 ‘분별없는 사익 주체’로 돌변하고 오히려 문제유발자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죄송하다. 체제와 권력은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갈등의 중재자로 개입함으로써 마치 공공적 사명을 다하는 양 둔갑한다. 바야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리바이어던 국가’의 중재와 통제가 당연시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인유발자, 가해자, 책무자는 면책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면 억울해 하고, 정작 피해자는 원인유발자면 죄송해야 하는 피해자유책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혐오는 구조화 된 차별적 권력관계를 물질적 토대로 하면서, 권력이 이데올로기적 강제와 동의에 의해 경멸을 증오화 하고, 다시 증오가 경멸로 변환하는 나선형적 상승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차별구조를 더욱 강고히 하는 결과를 유인한다. 이 과정에서 계급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구조의 권력관계는 사상되거나 왜곡되며, 마치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이전투구와 같은 갈등양상,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자리바꿈되고 마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예

컨대 ‘그 망할 놈의 학생인권’ 때문에 학생은 시민권의 박탈은 물론 인성파탄의 ‘짜가지’로 매도되는 반면, 체벌교사가 피해자가 된다. ‘그놈의 민주화’ 때문에 주권자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매도되고, 공권력이 피해자로 현현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혐오의 진앙지가 무화되거나 전도되고 마는 것도 똑같은 이치다. 이런 현상은 차별의 정도가 극심할수록 더욱 극악하게 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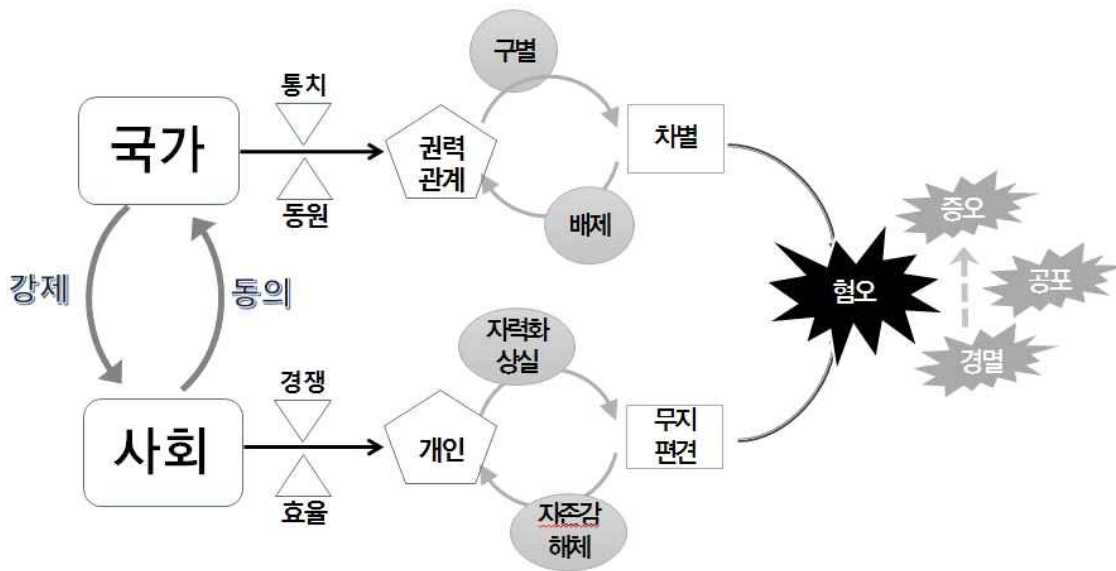
혐오의 사회적 작동기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我)’와 구별되는 ‘피아(彼我)’를 설정하여 분리, 배제하여 이를 선악(또는 정의와 불의)의 구조로 대체시키며,
- 둘째 분리와 배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을 타자화, 우선 공격대상을 삼으며,
- 셋째 아(我)의 결속수준을 높이고 진영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강제와 동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 행동 등의 정당화를 피하며,
- 넷째 ‘낙인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 다섯째 소극적 수준의 기피를 넘어, 적극적, 비타협적, 종말론적인 공격성, 또는 호전성을 가지며,
- 여섯째 인권과 같은 보편적 규범의 언어를 빌어 다수자, 보편의 프레임을 구성하며,
- 일곱째 진실이 아닌 허위를 사실로 여기(게 하)고, 주장하며,
- 여덟째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직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혐오	
양태	증오	경멸
의식작용	감성	이성
취득	선험적	학습적
주체	(잠재적)피해자	(잠재적)가해자
욕구	정의욕구(모멸감)	지배욕구(우월감)
대상	지배적 지위	피지배적 지위
주동성	대상	주체
태도	적극적 공격적	소극적 방어적
지향	부정, 소멸, 제거	회피, 무시
발화점	필연적	우연적

<시민권의 해체와 혐오발현의 구조>



### 3. 인권의 패러다임

그렇다면 혐오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혐오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증오선동자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혐오발현의 구조와 동학을 살펴보면 이른바 현실의 ‘혐오주체’를 가해자로만 간주할 수 없는 서사가 확인된다. 그래서 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혐오주체가 ‘동원됨으로 인해 스스로 소외된 자’, 즉 피해자일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증오와 경멸의 발원지는 현상적으로는 무지와 편견이고, 본질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주체의 역량의 결핍이다. 결핍은 주체의 무력화와 함께 무지와 편견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아마티아 센이나 마사 누스바움에 의하면 인권침해란 인간 존엄성의 결핍에 다름 아니며, 주체의 자존감과 자력화에 기반하여 결핍이 충족되는 과정 자체가 인권의 실현이다. 시민권체제에서 인권의 실현책무는 국가(권력)에 있다.

차별이 구조화 된 체제에서 국가(권력)은 통치의 필요에 따라 순치된 인간, 비판적 저항성이 거세된 인간, 시민성이 상실된 인간을 광범위한 공교육과 관습, 관행, 문화, 나아가 제도로 확대재생산하므로, 자존감과 자력화의 역량은 늘 결핍의 상태를 면치 못한다. 권력은 결핍의 해소, 충족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체의 결핍상태를 확대, 심화, 조장한다. 무지와 편견은 혐오의 인큐베이터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무지와 편견은 죄가 아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악(惡)”은 더더욱 아니다.

(스스로 초래했든, 강요된 것이든)무지와 편견은 결핍이 야기한 장애이고, 모든 장애가 그렇듯이 무지와 편견 역시 결핍상태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장애는 선악구별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는 “주체의 비정상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외부적 통제, 응징, 심판은 물론, 심지어 지원과 보완으로써 비로소 정상화” 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의해, 그 현존(現存)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주체이며, 장애의 원인과 실체를 ‘정상성

을 기준으로 장애화를 강요하는 구조'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어떻게 주체의 자력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존중과 배려를 내세워 그저 막연하게 '역지사지'라는 추상적 품성론에 빠지는 왜곡을 피하고, 국가와 시장 등에 구조화된 권력관계에 주목하면서, 결핍은 어디에서 유래됐고, 무엇이 결핍을 야기하며,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며, 해소를 위한 총족의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이의 혁파를 위한 역량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근원적으로 따져 물어 인간존엄성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인권 패러다임의 요체이다. 따라서 무지와 편견은 심판이 아니라 총족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혐오에 대응하는 인권의 패러다임은 차별을 구조화하는 권력관계에 긴장하면서, 자력화와 자존감의 증진을 통한 시민적 주체의 인권역량의 총족으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경멸과 증오로 발현하는 혐오의 뿌리를 제거하여 결국 인간존엄성을 회복 실현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접근이야말로 선순환적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속가능하기도 하다.

자력화는 자존감을 동력으로 삼는다. 자존감의 정반대편에 모멸감이 있으며, 아무리 '정의로운 질타' 일지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유발한다면 스스로 변화할 여지, 즉 자력화의 여지는 없어지고 만다. 혐오를 혐오해서는 안 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혐오에 대한 혐오적 대응은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1967년 연설("Where do we go from here?")에서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하는 자들처럼 악해질 수 있다" ("...the oppressed become as evil as the oppressor...")면서, "폭력의 궁극적 약점은 그것이 제거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히려 증식시켜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악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증식시킨다. 폭력으로 혐오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혐오, 그 자체를 죽일 수는 없다." ("The ultimate weakness of violence is that it is a descending spiral, begetting the very thing it seeks to destroy. Instead of diminishing evil, it multiplies it. Through violence you may murder the hater, but you do not murder hate.")고 하였다. 국가의 공권력, 특히 형벌권 역시 합법적으로 용인된 물리적 강제(=폭력)이라는 점에서 혐오주체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혐오를 없앨 수는 없다.

#### 4. 기독교 교리의 보편성과 세속화한 교회의 욕망

##### 4-1. 인간은 왜 신을 찾고 섬기는가?

우리는 왜 신을 찾고 섬길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

먼저 인간이 가진 사유능력(verstand)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진술에 의하면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I think therefore I am)이다. (기독교적으로)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점에서 사유능력은 곧 '신성'일 수 있고, 동시에 (철학적으로는)인간이 선형적 도덕성을 가진, 즉 오성적 존재임을 가리킨다. 신경다발의 고도화가 '양의 질로의 전환'에 따라 사유능력으로

진화한 것이라는 진화론적인 주장도 맥락상 같다. 인간의 사유는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향하기에 궁극의 형이상학적 존재를 찾고 섬긴다.

다음으로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한 치 앞의 삶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다. 미래가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초래한다. 공포와 불안은 인간의 실존적 정체성이기도 하다. 인간은 경험에 근거하든지,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가상의 존재를 설정하고, 믿음으로써 실존적 허약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경험에 기반해서 지식자산을 축적하고 사회 규범과 제도를 창설, 운영하는 한편, 믿음에 근거해서 종교생활을 영위한다.

전자가 경험적 대응이라면, 후자는 초월적 대응이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장)이다. 믿음에 의해 실재하는 초월적 존재는 보편성, 영원성, 정당성, 절대성, 무조건성을 갖는다. 그래서 믿음은 곧 진리로의 귀의이자 순응이다.

기독교에서 율법은 믿음의 규범이고, 교회는 율법 실천을 위한 제도이다. 율법이 믿음의 근거인 말씀(진리)이라면, 교회는 말씀의 증거(실재)이다. 따라서 말씀에 귀 막고 진리에 눈 감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컨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궁핍의 말씀을 섬기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랑 없는 교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모두 내 형제”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배제와 독선의 교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버리고, 팬데믹 사태에도 집합예배를 고집하는 교회에는, 당연히 말씀이 없다. 특히 천지창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고귀한 존엄성을 부여받았음을 증거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 4-2.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왜 혐오의 진앙지가 되었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왜 혐오의 최전선에 나서 ‘사랑’의 자리에 ‘증오’를 앉히고, ‘존중’의 자리에 ‘경멸’을 앉히고 있을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누가 진정 네 이웃이냐?”라는 예수의 엄중한 꾸짖음은 여전히 현존태이다.

유대인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던 변방의 기독교(zionism)가 세계종교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예수십자가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십자가사건이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환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른바 ‘계약의 완성’이다. 그런데 혐오에 앞장서는 한국교회에는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보다 심판의 하나님을 내세우며 공포를 인위적으로 조직하고 겁박한다. 신과 인간,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교회와 교회 밖, 신앙과 불신앙, 나와 타인 등을 적대적 대립관계, 즉 선과 악의 구조로 대립시킨다. 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계약의 완성이라는 기적을 이룬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을 소거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종교일반이 그렇듯이, 경전을 축자적, 교조적으로 암송, 해석한다. 신성국가, 정교일치로 상징되는 교회의 패권적 지위가 인류의 각성과

계몽으로 극복한 지가 이미 수백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교회집단이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한 교의를 교회 밖의 세계에까지 강요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은 물론 정교분리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일부 교회의 소수자 혐오가 있다.

니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금욕주의의 탈을 쓴 잔인성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암울하고 선동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다. 관능에 대한 증오, 육체에 대한 경멸, 즐거움과 관능 일반에 대한 증오가 기독교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야만적인 개념과 가치로 중무장하고 필요하다면 주위의 여타 민족을 야만인이라 단정하고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동한다. 첫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 성찬식에서 피를 마시는 것, (합리적)이성과 지혜에 대한 경멸, 육체적, 비육체적인 것을 막론하고 온갖 종류의 자기학대(고문), 기독교는 필요하다면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꼬집은 바 있다. 철학자 김용옥은 “오늘 우리 20세기를 회고해 볼 때, 우리 20세기의 최대의 죄악은 바로 악마와 천사라고 하는 알팍한 기독교적 사유 속에서 세상을 보았던 윤리적 이원성이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그래서 죄는 너의 것이다. 이 사회의 죄악은 모두 너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나는 그 죄악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저주하노라!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독선적인 주장을 강요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도, 온당치도 않을 것이다. 특히 내세구복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경향의 영지주의적인 보수기독교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데는, 그만큼 민중의 현실이 강팍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더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사회에서 반공이라는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진지가 구축된 것과 무관치 않다. 기독교 교회가 혐오전선의 최선봉에 서게 된 데에는, 유일신앙이 갖는 이원론적 세계관(하늘과 땅, 내세와 현세, 선민과 이방인)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문제의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독교 교리 자체나 신앙체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날 기성체제에서 강력한 정치적 헤게모니 집단으로 타락한 세속교회체제에서 찾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본디 기독교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공동체의 결속(선민의식)을 도모했다면, 신약에서는 기존의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의 재구성(이것이 이원론구조를 혁파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이다)을 통해, 즉 사랑과 관용을 내세움으로써 비로소 세계종교라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타락한 교회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보다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을 내세워 공포를 인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사람을 겁박한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명분으로 모조리 적대적 대립관계, 즉 선과 악의 구조로 대립시킨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와 분단체제에서 경험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굴곡은 그 자체로 권력과 교회가 교합하여 한 몸통을 이루는데 최적의 조합을 이루게 되었다. 일부 개신교의 혐오선동은 사실 기독교 신앙원리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기득권화한 교회의 권력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5. 혐오발현에 대한 인권적 대응

혐오에 대한 대응은 그 양태와 정도에 따라 사법적 접근으로, 또는 인권적 접근으로, 때로는 사법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의 연계를 통해 적절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접근일 지라도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 접근으로, 나아가 사법적 접근보다는 비사법적 접근으로, 그리고 비사법적 접근보다는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 대응은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심판적, 징벌적, 일회적, 행위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한편으론 필수적이라 해도, 인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계급사회에서는 이미 “누구나 법 앞에 평등” 하지가 않다. 우리 사회와 같이 “인권이 평소 법의 지배에 보호” 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는 사법만능적인 접근으로는 자칫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가 위협 당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권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가해 vs. 피해’ 구도를 ‘결핍 vs. 충족’ 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권침해상황은 가해/피해를 막론하고 인권역량의 결핍사태가 초래한 것이므로 이의 충족을 위한 조치, 예컨대 법제도개선이나 정책적 유인, 인권교육, 홍보, 협력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가해자(또는 침해자)를 배제하지 않고 인권증진에 주체로 초대함으로써 인권증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사후적 권리구제 방식으로 사법적 방식과는 달리, ADR 등과 같은 비사법적 권리구제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또한 법치주의의 수준이나 시민권의 확립 정도, 시민사회의 역량수준과 연동되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위의 사법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혐오에 대한 대응은 인권적 접근에 기반하되, 인권적 개입에 일방이 불복하거나, 또는 사안 자체가 민주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고 긴급성이 요구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접근으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위와 같은 차별시정기구와 사법부의 인권재판소 또는 인권전담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설계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가해자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꾀하는 방안 등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권적 접근에 기반하되,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그 판단의 준거는,

- 첫째, 혐오발화주체가 공인이나 사인이나
- 둘째, 혐오발화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권력관계의 성립유무
- 셋째, 혐오발화의 양태가 명백, 현존, 긴박의 위협으로 실재하는지 여부
- 넷째, 혐오발화의 공간이 공적 공간인가, 사적 공간인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혐오주체가 공인일 경우, 공적 영역에서 혐오의 양태가 혐오심일 경우는 불개입, 혐오표현은 규제(비사법적/사법적), 혐오행동은 규제(비사법적/사법적)한다. 사적 영역에서라면 혐오심은 불개입, 혐오표현은 불개입, 혐오행동에 대해서는 규제(비사법적/사법적)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공인이 갖는 권력관계에서의 지위특성과 사회적 영향력, 공/사영역의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또한 혐오주체가 사인일 경우, 공적 영역에서 혐오양태가 혐오심이라면 불개입, 혐오표현은 혐오대상에 따라 공인에 대해서는 불개입, 사인에 대해서는 규제(비사법적), 공/사인을 불문하고 혐오행동에 대해서는 규제(비사법적/사법적)를 원칙으로 한다. 사적 영역에서라면, 혐오심은 불개입,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불개입, 혐오행동은 규제(비사법적/사법적)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그 표현이 공인을 향한 것이 아닌 한, 자유주의적으로는 공론의 자유시장, 인권적으로는 인간정체성에 속박으로 번질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규제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소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2013년 2월 21일, 2년여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소위 ‘라바트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sup>1)</sup>’이라는 권고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차별과 적대 혹은 폭력을 유발하는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야 하고, 혐오표현은 가능한 한 좁게(엄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맥락(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법적)’, ‘화자의 위치(지위, 권력관계)’, ‘의도’, ‘내용 또는 형식’, ‘발화의 범위’, ‘증오유발 가능성과 급박성’ 등 6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같은 고려를 통해 ‘어떤 표현이 범죄가 되는 표현’인지, 또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로 규제할 표현’인지, 또는 ‘관용과 존중,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포용되어야 할 표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라바트행동계획은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부인하지 않지만, 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주에 그쳐야 하며, 결국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 등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보다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1)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13), 관련 링크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Opinion/SeminarRabat/Rabat\\_draft\\_outcome.pdf](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Opinion/SeminarRabat/Rabat_draft_outcome.pdf))

##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보도」 정책토론회 토론문

최명진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 ○ 코로나19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응

#### 1. 코로나 전담중재부 설치, 운영

올해 1월 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1월 30일 우한 교민 입국·격리, 2월 18일 신천지 관련 확진자 발생, 2월 20일 국내 첫 사망자 발표 등을 계기로 코로나 관련 언론보도가 급증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코로나 보도와 관련한 언론분쟁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3월 5일부터 코로나 관련 사건 전담중재부(서울제5중재부)를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5조 ③ “위원장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10월 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조정신청 사건은 총 107건이며, 코로나 전담중재부가 처리한 사건은 78건이며, 나머지 29건은 지역중재부(부산 1건, 대구 5건, 광주 1건, 대전 14건, 경기 5건, 충북 3건)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전담중재부의 코로나 관련 사건 평균처리기한은 13.5일로 올해 일반사건 처리평균기한 약 18일보다 약 5일 빠르게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차별, 혐오 관련 시정권고 강화

위원회 시정권고의 기준이 되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에는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종교 비방금지’와 ‘지역감정 조장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심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5년에 삭제되었다. 이후 2016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9년 3월에는 차별금지 대상에 국적, 지역, 나이 등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의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2019년 혐오,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결정을 한 사례는 9건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와 관련한 차별, 혐오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시정권고 결정을 취하고 있다. 올해 10차까지 진행된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차별, 혐오를 근거로 시정권고를 한 사례는 총 110건이며, 이 중 코로나 관련 사안은 100건으로 나타났다.

혐오, 차별과 관련한 시정권고는 지난 5월 대규모 이태원 코로나 감염 사태 관련 게이클럽 보도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가 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는 코로나를 대구 코로나로 지칭하거나, 중국인 차별 표현, 마스크 안 쓰는 노인 표현 등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 ○ 보건 위기 속 언론보도,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 1. 속보성과 정확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 으로 나누고 ‘자연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인 코로나의 확산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므로, 언론보도 역시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할을 부여 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한정된 기간 내 폭발적 영향력으로 단기적, 지역적 피해를 일으키는 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발생 지역의 광범위함, 발생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누적 피해가 강하다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보도는 이러한 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전염병은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빨리 차단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 등과 같이 접촉 차단을 위한 정보는 속보성이 우선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역 정책, 코로나 발생 현황과 같은 사안들은 성급한 보도로 인한 오보가 더 큰 혼란을 주고 방역 노력

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의 보도라고 하여 모두 신속성이 우선될 수는 없고, 각 재난상황의 특성과 사안에 따라 신속성과 정확성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판단되어야 한다.

## 2. 개인정보와 알권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방역 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인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생명권)을 위한 알권리가 개인의 사생활에 우선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개인정보의 공개가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확진자는 새벽에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다는 이유로 대중의 입길에 올랐으며, 노래방을 수차례 방문한 확진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냐는 댓글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처제와 식당에 간 확진자는 불륜이 아니냐는 억측에 시달리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보도로 공개된 동선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지속시킨다는 점이다.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달되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게 된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공동체 안전을 위한 알권리의 균형을 찾음에 있어 우리는 오히려 인터넷의 특성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론의 확진자 동선 보도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공개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론은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 그 발생 사실과 같은 일반적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도하되, 확진자의 동선 정보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공개 홈페이지 주소만 링크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예방에 필요한 기한 이후에는 삭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독자들이 발생 장소를 필요한 기간(코로나의 경우 14일) 동안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남아 피해를 야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보건 위기 속 언론보도,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강화했는가

#### 1. 위기 상황과 특정 집단의 몽타주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독립된 장면을 이어 붙여 연관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

을 뜻한다. A라는 장면과 B라는 장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두 장면을 이어 붙임으로 A와 B를 연결된 스토리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이러한 몽타주 효과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매일 많은 보도를 접하고 해석하게 된다.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라 할지라도 해당 보도는 완벽히 개별적이고 독립된 정보로 읽히지 않는다. 당시의 사회적 이슈, 함께 배치된 기사 등 바탕 된 맥락 속에서 기사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말 한 언론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위생관념 부족 … 손으로 거리음식 만지작’, ‘길 바닥에 가래침 함부로 뱉는 위험천만’ 등의 소제목과 함께 본문에는 “마스크 대란에도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둔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역 주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우한 폐렴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생적 행태가 즐비했다”, “일부 행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라고 적었다.

이러한 기사를 읽는 독자는 대림동 상인과 거주자들의 위생관념이 다소 부족하고, 마스크를 착용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다는 맥락과 합쳐져 해석된다. 이를 통해 기사는 독자에게 중국인과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이 국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인 또는 화교의 위생관념 부족이 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이다.

5월 연휴에 발생한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도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은 클럽이 ‘밀집 접촉 시설’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했음에도 언론들은 단순히 클럽이 아닌 ‘케이 클럽’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이후 일부 언론은 코로나 감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소수자들의 전용 시설 이용 형태 등만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앞선 예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기사로 읽히지 않는다. 물론, 개별 기사도 차별과 혐오적 시선에서 작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사는 코로나 확산 장소라는 맥락과 함께 성소수자의 행태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소수자는 향후 반발 가능성이 낮아 쉽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며, 소수자에 대한 기사는 사회적 맥락과 합쳐질 때 부당한 차별과 혐오가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위험 요인 자체가 아닌 발생한 위험의 외형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집단을 부각하는 것이 당시의 맥락과 합쳐져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는 피해가 소수자에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부추겨진 세대, 성별 혐오

‘자가격리 기간에도 수차례 스타벅스 간 20대 여성 결국...’, ‘“나 확진자야” ... 지하철서 난동부린 50대男 코로나 음성’,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60대 남성 구속’ 등은 언론이 코로나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용한 제목들이다.

이 기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나이, 성별을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달된다. ①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외출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확진을 받기까지 했고, 결국 1000만 원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는 사실 ②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일부 승객을 폭행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③ 마스크 착용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리면서 굳이 나이와 성별의 공개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나이와 성별의 공개는 보도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대와 성별에 대한 혐오와 차별만 유발할 위험이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 수차례 스타벅스 간 20대 여성’ 제목의 기사는 자가격리 의무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대신 20대, 여성은 공동체 의식이 없고 무분별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혐오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 확진자야” ... 지하철서 난동부린 50대男 코로나 음성’,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60대 남성 구속’ 제목의 기사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 대신 50대, 60대 남성은 난동이나 부리는 막무가내 세대라는 혐오적 인식만 심어준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우리 언론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나이와 성별의 표시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로서 기사 신뢰를 높이는 장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가 항상 유용한 장치로서 작동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선 예시들 같은 상황에서 사용된 나이와 성별의 표시는 오히려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까지 덮어버리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언론보도의 신뢰와 품격, 언론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코로나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면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보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지난 4월 28일 공동으로 ‘감염병보도준칙’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가 발생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언론인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까지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 언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준수여부다. 감염병보도준칙은 전문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언론인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사 작성 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구성된 세부 사항들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기만 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논란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기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보도에 대한 데스크의 올바른 방향 설정도 중요한 요소다. 알 권리와 사생활을 훑쳐보는 관음증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의 산물로서 보도를 내놓아야 하다. 단편적인 사실을 췌어 만든 자극적 보도를 통해 독자 또는 시청자의 주목을 끌거나, 단독보도의 유혹에 현혹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히 공개하는 일은 자제하여야 한다. 신속히 공개해야 할 내용과 정확성을 기해야 할 사안을 가려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당 보도가 차별과 혐오를 불러오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방역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얻을 수 있는 신뢰와 품격은 이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